여권, 현철사면 역풍 '비상'

하루종일 항의전화 빗발

여권이 김현철(金賢哲)씨 사면에 따른 역풍(逆風)에 시달리고 있다. 실제 13일 국민회의 당사는 현철씨 사면에 항의하는 전화로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였다. 민심심은 물론 당직자실과 각 국·실에는 하루종일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이러고 표 달라고 할건가"
고급옷 사건 '재연' 악몽
뾰족한 대책없어서 고심

심지어 당직자나 의원들의 자택에까지 항의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전언이다.

특히 항의전화의 태반이 호남 사투리를 쓰거나 서울말씨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국민회의의 당혹감은 한층 큰 듯하다. 항의 내용도 과격하다. 욕설을 퍼붓는 경우는 예사고 『이래놓고 총선에서 표를 바라느냐』는 울난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회의는 삼도동 반응에 대해서도 내놓고 얘기는 안하지만 내심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현철씨가 사죄나 자숙의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삼도동에서 부분사면으로 끝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여론이 더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핵심당직자는 『대통령이 엄청난 비난여론을 무릅쓰고 사면을 했을 때 자기 몸 부담을 왜 저들만 모르느냐』고 한탄했다.

국민회의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대목은 현철씨 사면이 고급옷사건 때의 악몽을 재현하는 쪽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고급옷사건 당시 벗방치는 여론의 요구에도 불구, 김태정(金泰政)법무장관을 경질시키지 않았다가 3·30재·보선에서 참패를 당했듯이 현철씨 사면이 민심이반을 촉발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당장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8·19 고양시장 선거에도 직접적 영향을 미칠 분위기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번에 부분사면을 해놨으니 또 연말이 되고 총선이 다가오면 현철씨 따른 문제가 거론되지 않겠느냐』면서 『현철씨 문제가 내년 총선때까지 두고두고 여권을 괴롭힐 것 같다』고 걱정했다.

국민회의의 고민은 현철씨 사면으로 뜸끔는 여론을 다독일 방책은 현 수단이 없다는 데서 더 커진다. 옷사건때는 검국 나중에 검찰의 과잉유도 의혹을 걸어 김태정 장관을 경질, 버텨볼 수나마 수습을 했지만 지금은 그럴 카드조차 없다. 당직자들도 대책을 묻는 질문에 『현철씨 사면에 대한 여론이 식기를 기대하는 것 외에는 달리 대책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할 뿐이었다.

양권모기자
suzu@kyunghyang.com

일보는 《법과 원칙이 무너져서는》(8/9 11면), 《"현철씨 결국 사면되는가"》(8/12 사설), 《김현철씨 변칙 사면 사법 질서 흔들》<법조-노동계 시민단체 반응>(8/13) 등을 실었다.

경향신문은 8월 13일자 4면에서 《권력비리 풀어주고 개혁되나 - 김현철 사면 각계 분노-》를 기사화했고 같은 면에서 《국민 여론보다 정치 논리 선택- 부분 사면 배경과 문제점 - / PK신당 YS달래기 고육지책. 민심반발 거세 묘수 찾다 악수 둔 셈》이라는 제하의 해설기사를 실었다. 또 **《여권, 현철 사면 역풍 비상》**<"이러고 표 달라고 할건가" 고급옷 사건 '재연' 악몽. 뾰족한 대책 없어서 고심>(8/14 5면)에서는 김현철 사면이 정치적 이해득실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초점을 맞춰 보도, 정치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이번 사면을 해석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상 살펴본대로 이번 사면 보도는 양심수 사면 논의가 김현철 사면으로 철저히 묻혀 버린 데다 그 마저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부각·보도되는 경향을 보였다. 김현철 사면이 갖는 법적 형평성이나 사회정의 및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접근이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구색 맞추기식 비판이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한편 대통령의 권력형 비리인사에 대한 사면권 제한보도도 눈에 띄는데 이것은 일회성 문제제기가 아니라 그 문제점을 일신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것이 바로 언론의 책임임을 다시 한번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동티모르 사태 관련 보도

경향,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논조의 일관성 상실, 빈약한 인권의식 드러낸 보도

그 동안 극심한 인권유린으로 주목받았던 동티모르는 9월 6일 하루동안에 1백 70명이 사망하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대해 국내 주요일간지들은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평화유지군 파병에 적극적이던 대부분의 신문이 9월 13일 막상 한국군 파병논의가 구체화되자 '신중론'을 내세우며 부분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이러한 입장선회로 볼 때 각 신문이 애초에 주장했던 '적극적 개입'은 보편적인 인권옹호 차원에서 제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국제사회에서의 입지', '인권옹호' 등의 목소리 역시 피상적 구호에 그치고 실질적으로는 자국이기주의의 일면을 보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다.

'인권옹호' 피상적 구호에 그쳐

대부분의 신문은 9월 8일 사설을 통해 동티모르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미국 등 서방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반발이 두려워 동티모르 사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면 국익의 잣대로 인권문제를 재단한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하여 국익보다 인권이 우선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날 동아일보 역시 "이대로 놔둔다면 지구촌은 후세에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또 다른 오점을 남길 것이 분명하다"며 개입의 필요성을 완곡하게 주장했다. 중앙일보와 한국일보도 비슷한 내용의 사설을 실었다. 중앙은 "우리 역시 동티모르의 비극을 외면해선 안된다." 라며 "정부는 이미 유엔으로

부터 동티모르에 경찰병력 파견을 요청받고 이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제화시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가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책임있는' 조처라는 중앙일보의 판단을 읽을 수 있다. 한국일보는 "동티모르 사태는 국제사회가 진정한 정의를 구현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가 되고 있다"며 강대국, 지역국 할 것 없이 국제사회가 진정한 정의구현을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9월 6일 첫 사설을 내보냈다. 이날 조선은 "우리 정부도 동티모르의 독립국가 건설을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라며 개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13일자 사설에서 조선은 조금 더 강도를 높였다. 이 사설은 "인권유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데도 인도네시아 정부는 물론이고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 역시 여전히 방관자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다." 라며 "동티모르의 인권유린 참상은 어떻게 보면 코소보 사태 때보다 더 끔찍하다. 그런데도 국제사회는 말뿐이지 행동이 없다" 며 강도높은 비판을 가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조는 인도네시아가 평화유지군 수용의사를 밝히고 김대중 대통령이 파병의사를 공식화한 13일 이후 변하기 시작했다. 파병에 대한 '신중론' 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이다.

파병논의 구체화되자 '뒷 걸음질'

15일자 각 신문은 <전투병력 파견 신중해야>(동아), <전투병력 파견 신중해야>(한국), <동티모르 파병에 유의 할 일>(중앙), <전투요원 파병은 안돼>(조선), <전투부대 파병 신중해야>(경향) 라는 사설을 일제히 실었다. 각각의 사설을 보면 "동티모르에 파견되는 비전투부대는 본래의 임무인 의료봉사나 파괴된 건물과 도로복구에 전념해야지 섣불리 분규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동아), "우리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인도네시아에 꼭 전투부대까지 파견해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다" (조선), "국제사회에 우리의 인권수호 의지를 과시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파병규모를 정하되 가능한 의료, 공병을 중심으로 한 비전투부대를 파병할 것을 권고하고 싶다" (경향) 등 대체로 전투부대 파병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은 비록 '파병 절대불가' 가 아닌 조건부 파병을 말하고 있지만 앞서 '국제사회는 말뿐이지 행동이 없다' (조선), '국제화시대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대접받고 살아가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중앙), '이해타산과 말만 앞세우는 위선' (한국) 등 국제사회의 이기주의적 태도를 비판했던 신문들이 정작 실천의 문제에 이르러 국가 이기주의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일관된 논조를 보인 신문은 한겨레와 대한매일이었다. 이들 신문의 논리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파병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한겨레는 14일자에 이어 15일자 사설 <동티모르 파병 지지한다>에서도 "우리군이 동티모르 독립실현과 평화회복에 나름의 공헌을 할 수 있다면 그것처럼 뜻 있는 것도 드물 것이다 … 민주주의 확보와 인권 존중이 형식적 외교관계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본다." 고 주장하였다. 같은 날 대한매일 역시 사설 <동티모르 파병 의미>에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는 일은 국제사회의 의무와 도리이며 이는 우리나라의 위상으로 보아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다" 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보호차원에서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대한매일의 사설은 대통령 치적 세우기에 여념이 없었다. 바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이번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동티모르 사태의 논의를 주도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고 부분이 바로 그렇다.

대한매일 9월 21일자에 실린 <동티모르파병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하의 김삼웅 칼럼 역시 비판받았다. 파병의 정당한 근거를 몇가지로 요약, 설명한 이 칼럼은 한국전쟁이나, 베트남전과 관련, "유엔의 깃발아래 참전하여 공산침략에서 나라를 구하고 전화복구를 도와주었다", "10억 달러의 외화를 획득하여 연평균 12%의 경제성장을 달성할 수 있었다"며 긍정적 시각을 보이면서 동티모르 파병을 지지했다.

그러나 한국전은 냉전시대에 발생한 것으로서 이념적 갈등을 내포한 '전쟁'이었던 반면 동티모르 사태는 전쟁의 측면보다 일방적인 학살과 인권유린의 문제가 훨씬 큰 문제이다. 따라서 동티모르 사태를 전쟁과 수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베트남전에 대한 평가는 많은 후유증과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외면한 것으로 비판받았다.

이밖에도 한국일보 21일자 지평선 칼럼과 조선일보 9월 15일자 사설은 인권보다 국익이 우선임을 매우 노골적으로 드러내었다.

한편 조선일보는 9월 21일자 1면에 인도네시아 교민의 성명을 광고로 실었다. 이날 사설 <파병의 몇가지 조건>에서 조선은 1면 광고내용을 언급하면서 교민의 안전과 우리군의 안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 이어 "파견부대의 구성을 비전투원 중심으로 하도록 재고"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익우선주의적 시각에도 불구하고 동티모르의 참상을 전하는 국제면은 많은 독자들로 하여금 전투보병의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다. 조선일보 9월 15일자 국제면(8면) <동티모르 학살사태 날로 악화>라든가, 같은 날 조선일보와 한국일보 만평 등이 그렇다.

이러한 측면에서 계속되는 민병대의 학살을 담아내는 국제면 기사와 전투보병 파병을 반대하는 각 신문의 사설. 이는 분명 일관성을 상실한 보도태도다. 더 나아가 파병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과정에서 한국 신문이 국익중심의 논의로 몰아간 것은 그들의 빈약한 인권의식을 반증한 것이었다는 목소리가 높다.

"美軍 6·25때 양민학살 文書확인"

AP '노근리 사건' 보도

독자투신

노근리 외신 보도 이후 언론의 자세

진상규명 뒷전,

'한미우호' 의치우다 정신없는 언론

이홍호

종군기자 보도에 처벌 시늉만

'노근리 양민학살' 보도 관련

언론의 '대미 사대주의'에 묻힌 우리의 자존심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7월 미군에 의해 자행된 충북 영동 노근리 양민 학살. 지난 50여년간 은폐와 묵살로 일관해 온 우리 정부와 보수언론을 깨운 건 '가해당사국' 미국의 한 통신사 보도였다.

지난달 30일 AP통신은 '미국정부의 공식문서와 참전 미군들의 증언폭로' 보도를 통해 노근리 사건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에 국내 언론들은 전혀 새로운 사건을 다루듯 이를 '특종'으로 대서특필했다. 문제는 AP의 보도가 있기전에 이미 피해당사자인 노근리 주민들과 시민단체, 그리고 한겨레신문, 월간말, MBC 등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이 사건이 줄기차게 제기돼왔다는 데 있다. 국내 언론은 이를 무시한 채 지난 50여년간 진실 보도의 의무를 져버린 스스로의 책임을 회피했을 뿐 아니라 AP통신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에만 의존하는 취재력의 한계를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노근리 등 미군 양민학살사건들을 보도하면서 진상파악이나 피해자 배상, 책임자 처벌과 같은 본질적인 문제보다는 이 사건이 한미관계에 미칠 파장만을 지나치게 염려함으로서 우리 언론의 뿌리깊은 대미 사대주의를 드러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AP 보도 보다 앞선 국내 보도 '무시'

조선, 동아, 중앙 등 일부 보수 일간지들은 AP통신의 노근리 보도를 '첫 보도'로 추켜 세웠다. 그 이면에는 AP통신 보도가 있기 전 이미 수차례 이 사건을 보도한 국내 언론이 있었다는 사실을 '무시' 했거나 고의로 '은폐' 하려했다는 의혹이 있다.

중앙일보는 10월 11일자 사설 <한미, 노근리 공동조사해야>에서 "미국 AP통신의 끈질긴 탐사보도로 그 사건의 실체가 처음으로 드러난 지난달 말 이후..." 라며 '첫 보도'를 유독 강조했다. 10월 3일자 분수대 <노근리 사건과 기자정신>에서도 "AP 특별취재팀이 보여준 철저한 기자정신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으로 정작 당사자인 한국언론은 그 동안 무엇을 했을까를 생각하면 자괴하는 마음뿐이다" 라며 '선수를 놓친' 국내 언론의 '자괴감'까지 드러냈다. 동아일보 역시 10월 2일자 김학준 칼럼 <노근리 학살과 국가기록>에서 "이 사건의 진상을 우리 정부 또는 우리 학계나 언론이 먼저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낀다" 라고 안타까워한다.

이렇듯 이들 신문들이 AP통신 보도를 '특종' 이라며 호들갑떠는 이면에는 이미 일부 국내언론의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밝혀낼 기회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짙다. 이미 이들 보도에는 AP통신이 찾아낸 미국정부의 공식문서나 참전 미군들의 증언만 첨가되지 않았을 뿐 그 비극의 전말이나 사망자 리스트, 미약하나마 그 작전일지까지도 상세히 보도된 바 있다.

이는 또한 사건의 본질과 사실 여부를 떠나 국내보다 외국 언론의 보도가치를 더 크게 평가하는 보수신문들의 뿌리깊은 사대주의와도 무관치 않다. 조선일보의 경우 10월 1일자 사설 <노근리 한 풀어줘야>에서 "그 엄청난 비극이 이제서야 널리 전해진 점이 우선 안타깝고, 우리 언론 아닌 외국통신이 그 내막을 취재보도한 점 또한 민망스럽다.....부분적으로는 일부 언론에 그 사연이 소개된 바 있었다" 며 앞선 보도가 있었음을 어느 정도 시인하고 있으나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당사국인 국내 언론의 보도는 한낱 '사연'으로 취급하고 사실상 '가해당사국'인 미국의 AP통신 보도에 '공신력'만을 인정했다는 점은 조선일보의 사대주의적 보도행태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반면 한겨레 10월 6일자 논단 <노근리와 AP와 사대주의>(오연호 월간말 취재부장)에서는 이와같은 '사대주의'의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노근리 사건을 94년부터 보도해온 [말]이 볼 때 이번의 AP보도는 마무리에 불과하다…AP보도에 대한 '주요' 언론의 반응을 보면서 전형적인 사대주의를 감상하고 있다…국제적 낙종도 부끄러울진대 자성하는 과정에서 '사대주의적 오보'를 더하지 말라… AP에게 박수를 보내되 정확히 보내자. 그들의 깔끔한 뒷마무리에" 라며 이미 노근리 사건을 보도한 당사자 입장에서 주요언론들의 노골적인 사대주의적 보도행태를 꼬집고 있다. 그밖에는 경향신문만이 10월 1일 사설 <노근리에 묻힌 미국의 양심>에서 "AP통신은 이번에 기밀 해제된 미공군 보고서들을 인용해 미군의 양민학살을 확인, 세계에 공개한 것이지 전혀 새로운 사실을 처음 보도한 것은 아니다…그동안에도 이 사건은 몇몇 뜻있는 사학자들과 재야단체들의 노력으로 진상이 어느정도 밝혀졌고 국내의 몇 개 언론매체에서도 단편적으로 보도됐을 만큼 꽤 널리 알려져 있다" 라며 비교적 사실에 접근하고 있을 뿐이다.

우리의 언론이 진정 반성해야 할 것은 AP통신에 노근리 사건 첫 보도를 빼앗겼다는 값싼 '자괴감'이 아니라 이미 다른 국내 언론이 보도했거나 시민단체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한 이 이 충격적인 사건을 권력의 입장에 서서 은폐하고 묵살해 온 스스로의 기회주의와 대미 사대주의일 것이다.

심층취재 없이 AP통신 받아적기에 급급

뒤늦긴 했지만 AP통신 보도를 계기로 노근리 양민학살 사건이 전세계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상 피해당사국인 국내 언론의 보도는 다른 나라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유리한 현장 접근성을 활용, 외국 언론사가 흉내낼 수 없는 다양한 심층보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근리 사건과 이를 계기로 다른 지역에서 잇따라 터져 나온 미

국의 양민학살사례를 다룬 기사는 한마디로 함량미달이었다는 지적이다. 실제 주요 일간지들은 많은 지면을 AP보도 인용에만 할애할 뿐 폭넓은 현장보도나 심층보도는 기대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한겨레 신문 10월 15일자 <'다 날려버려' 불길 치솟으며 산산조각>이라는 기사와 한국일보 10월 4일자 <발포명령 누가 재가했나>의 기사는 AP통신의 보도를 번역해 그대로 옮겨싣고 있다. 한국일보 10월 1일자 <민간인 적간주 발포명령>, 동아일보 10월 1일 <미군, 피란민 적간주 사살명령>의 두 기사 역시 제목과 기사 문구가 조금씩 다를 뿐 AP 기사, 사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전체적인 노근리 보도 기사들은 이처럼 AP연합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한다든가, 주민들 인터뷰기사를 확대해 싣거나 했을 뿐이지 언론의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 더 큰 문제는 피해자 보상대책이나 진상규명등에 대한 심층적이고 지속적인 보도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근리를 포함한 마산, 창령, 문경, 거창, 함양, 낙동강 교량 폭파 사건등의 양민학살 실상 등도 AP의 보도기사를 인용한 것일 뿐 현장취재하거나 탐사보도한 기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비단 노근리만의 문제가 아닌 것을 진정 '노근리 사건을 외국언론에서 먼저 보도한 것에 대한 자괴의 마음' 으로 반성한 언론이라면, 노근리 외 타지역들의 양민학살실상을 이번에는 제대로 보도하는 태도를 보여야 했을 것이다.

진상규명 보다 '한미 우호' 가 더 중요?

동아일보 10월 2일자 김학준 칼럼을 보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배상하는데 인색하지 않은 점에 미국의 대국다운 금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라며 미국의 '대국'다운 태도를 강조한다. 여기에 실질적인 피해자 보상 없이 단 한 명의 책임자 처벌에 그친 베트남 '밀라이 학살' 의 전례는 자연스럽게 감춰진다. 이렇듯 국내언론은 겉으로만 진상규명을 촉구할 뿐 실질적인 가해자 처벌이나 명예회복, 배상문제 등 피해자에게 절실한 요구 앞에서는 지나치게 머뭇거리고 있다. 반면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반미감정'이 촉발될 것을 우려했는지 조선일보를 비롯한 극우, 보수언론들은 진상규명에 앞서 '차분한 대응'만을 유독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혈맹관계'임을 강조하며 자칫 두 나라간의 관계에 금이 가지않을까 전전긍긍하는 태도까지 보여줬다. 이는 결국 이들 보수언론의 뿌리깊은 대미 사대주의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10월 8일자 기자수첩 <맥아더와 노근리>에서 "베트남이 최근까지도 미국의 적국이었던 반면, 한국은 흔히 미국의 혈맹으로 불리는 관계다. 진상규명 못지않게 이를 다루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모두 차분히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한다. 10월 22일자 <노근리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시론(정창인)에서도 역시 "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은 조직적인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불행한 개별사건으로 취급하여야 하며, 다른 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북괴의 침략으로 붕괴직전에 있던 한국을 방어하고 민주주의를 지켜 오늘날의 번영을 누릴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미군의 공로를 이 사건을 이유로 격하시켜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이 반미감정을 유발한다거나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근거로 이용되어서도 안 된다. 이것은 북괴의 심리전과 전략에 말려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모든 불행은 김일성의 전쟁도발로부터 시작된 것이며, 모든 책임은 김일성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한미간의 관계 중요성을 내세우는 이런 식의 '반공의식' 짙은 주장은 자칫 미군 양민학살 피해자들의 고통 해소를 위한 진상규명의 필요성 마저 희석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중앙일보 역시 10월 12일자 중앙시평 <작은조각 큰 그림>에서는 "그때 발생하는 적측의 사상자가 반드시 무장군인에 국한되리란 보장이 없다. 지난날 월남파병군의 경우 민간인 살상이 전무하지 않았었다. 그것이 전쟁의 생리다" 라는 주장 역시 위험스럽기만 하다. 한국일보 역시 10월 16일 사설 <꼬리무는 양민학살>에서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해 남한을 공산화 위협으로부터 구출하려왔던 미군이 마치 야만인으로 비춰지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될것이다…한미 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금가게 하는 이같은 주장들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낱낱이 가려내야 마땅한 일 아닌가" 라고 주장한다. 가해당사국인 미국언론에서 조차 문제시하고 있는 '전쟁중 양민학살' 문제에 피해당사국의 언론들이 이처럼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나 일방적인 의존이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일 수 없다. 막연히 반미 감정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한 이런 기사들은 단지 미국을 적대적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우리의 '수호천사'인 미국에 반하는 보도를 할 수 있냐는 맹목적인 '사대주의'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진정한 한·미 관계를 위해서도 이같은 사건은 두 나라의 이해관계를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그에 걸맞는 반성과 책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맺는 글; 또다른 양민학살 의혹 푸는 계기로 삼아야

AP연합의 보도 이후 국내언론에 '노근리 바람'이 부는 듯했으나 20여일이 지난 지금 국내언론에서 노근리 기사를 찾아보기란 쉽지않다. AP가 비중을 두고 보도를 한 노근리 사건은 국내에서도 큰 이슈가 됐으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개정, 주한미군범죄 등 한미관계에 관한 현실적 이슈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다. 이는 노근리 사건이 터진 50여년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국내 보수언론의 '미국관'에 따른 것이다. 이렇듯 한 나라에 대한 뿌리깊은 '사대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국제 언론계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조차 올바른 언론의 자리매김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야 과거 독재, 군사정권기를 거치며 노근리 사건을 비롯한 미군 양민학살을 철저히 은폐해온 정부에 대한 반성과 책임에 대해서도 당당히 질책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번 노근리 사건을 계기로 6.25 전쟁 중 국군에 의해 저질러진 양민학살이나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양민학살 의혹에 대한 국내 언론의 관심과 정부의 진상규명의지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독자통신

노근리 외신 보도 이후 언론의 자세

진상규명 뒷전, '한미우호' 외치느라 정신없는 언론

이종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신문모니터분과 총무)

노근리는 그동안 재갈이 물려져 왔었다. AP보도 이후 빛을 보고 있지만, 그 재갈이 풀렸다는 데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그 재갈은 '반미 경계경보'라는 망령이며, '한미 우호'라는 내적검열의 강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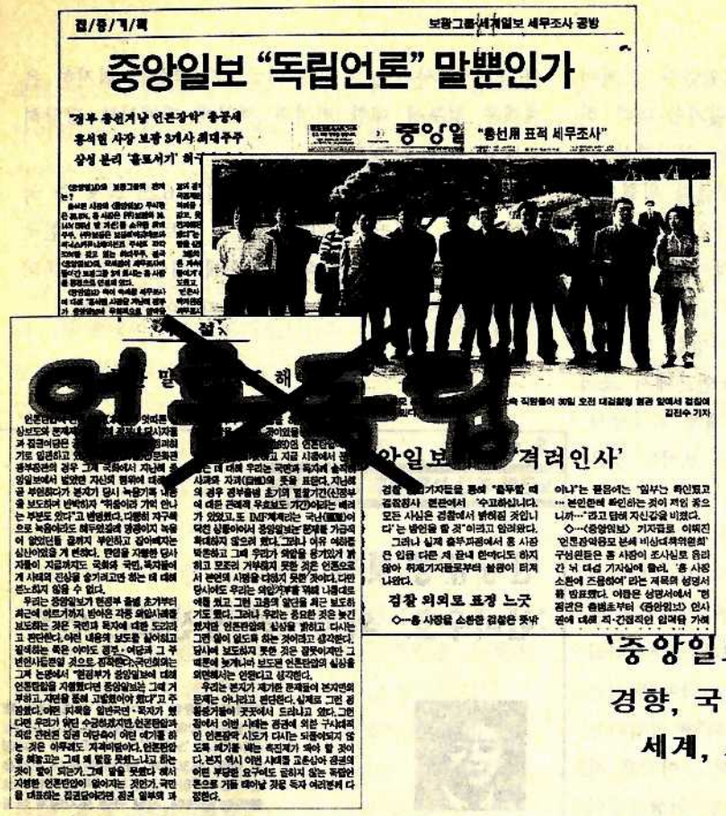
노근리를 비롯한 피해지역의 사람들은 보상요구는 커녕 진상조사조차 제대로 요구하지 못했다. 그 피해가 인민군에 의한 것이 아닌 미군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미군한테 죽었다면 '빨갱이'라는 것이 공식인 사회에서 그들은 이중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 노근리 학살에서 어머니와 동생을 잃은 한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정리한 글 말미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지만, 이 일을 반미감정의 확산으로 삼으려는 불순세력을 배격한다'고 적고 있다. 이번에 봇물처럼 터져 나온 피해사례들은 '이 일을 얘기하면 빨갱이로 몰릴지도 모른다'라는 내적검열의 굴속에서 빠져 나온 것들이다. 이제야 겨우 입을 떼게 된 그들에게 언론이 다시 한번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그 재갈은 늘 한미우호를 생각하고 반미를 경계해야 한다는 '내적검열통제장치'이다.

10월 15일자 한국일보 사설 <꼬리무는 양민피해 의혹>에선 양민피해주장에 대해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검증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한미양국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금가게 하는 이같은 주장들은 사실의 진위여부를 낱낱이 가려내야 마땅한 일 아닌가"라고 글을 맺고 있다. 10월 8일자 조선일보 기자수첩 <맥아더와 '노근리'>에서 박두식 특파원은 미국 노포크의 한국관련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한국은 흔히 미국의 혈맹으로 불리는 관계다. 진상 규명 못지않게 이를 다루는 과정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모두 차분히 숨을 고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외에도 대부분의 신문이 유사한 논조의 글을 실었다. 피해자들은 냉전의 시대를 숨죽이며, 고르고 고르느라 이젠 숨이 넘어갈 나이에 이른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한미우호'를 요구하고, 느닷없는 '반미 경계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이 땅의 언론이다.

노근리 이외의 지역들은 전쟁의 상흔으로 가난에 시달리고 노환으로 대책위 구성은커녕 명단작성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다. 그런 탓인지 지방지 이외엔 별 관심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이 되는 합동위령제나 기사작성에 편리한 '보도자료'조차 보낼 여력이 없는 탓에 다시 한번 소외되고 있다.

중앙일보의 10월 3일자 분수대 [노근리 사건과 기자정신]은 "AP 특별취재팀이 보여준 철저한 기자정신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으로 정작 당사자인 한국 언론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가를 생각하면 자괴하는 마음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그러나 '자괴'만 할 뿐 그 이상의 노력은 없다. 현장조사는커녕 지방지 등에 실린 기사를 인용보도만 하면서 "정확하지 못한 주장들도 일부 포함돼 있을 개연성"을 말하는 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가. 한겨레신문, 월간 말 등 여러 매체에서 보도할 때는 외면하다가 AP에서 보도하자 대서특필하고, 유사한 사례 취재는 또 다시 모르는 척하는 언론.

보내주는 보도자료나 보고, 기자회견이나 다니는 '책상물림 기자'들이 언제까지 'AP 따라잡기'는 하지 않고 'AP 받아쓰기'만 할 것인가.



'중앙일보 사태'에 대한 보도 경향, 국민, 대한매일, 동아, 문화 세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언론자유 왜곡하는 중앙일보, '사주를 위한 신문(?)'

지난 7월 1일 세계일보사의 정기법인세 조사와 중앙일보 관계사인 보광그룹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는 국세청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의 구속으로 이어진 이른바 '중앙일보 사태'를 두고 '비리척결'과 '언론길들이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길들이기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 중앙일보는 세무조사가 공식화된 7월에는 물론 최근 홍석현 사장 구속을 전후로 연일 1면기사와 사설을 통해 정부비판기사를 쓰고 있고 이미 7월2일자 사설 <'언론 길들이기' 나섰나>에서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이 사설은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국세청의 세정업무로 어떤 기업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지만, △시기의 문제나 △권력쪽의 대 언론불만 등의 근거를 들어 내용 대부분을 언론 길들이기 압박용에 대한 반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7월 5일자 옴브즈맨 칼럼은 중앙일보의 과도한 대응이 '제목달기의 왜곡'으로 이어진 사례다. 김병익 문학평론가가 쓴 이 칼럼의 제목은 <언론탄압 우려엔 공감>. 그러나 칼럼은 "이 사건에 대한 중앙일보의 깊은 우려에는 공감하지만 아직까지 어딘가 꺼림칙하게 소감이 남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며 양면을 모두 거론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어지는 내용으로 보아 주장의 핵심은 "중앙일보가 이 문제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하는 점이다. … 보광그룹이 중앙일보 발행인과 관계된 것이라면 그 보도와 해석은 보다 신중하고 겸손해야 마땅할 것" 이다. 상식적으로 제목은 글의 핵심주장을 다는 것이고 신문기사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 칼럼의 제목 '언론탄압 우려엔 공감' 은 독자들로 하

여금 칼럼내용을 잘못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길들이기' 의혹 있으나 너무 민감하게 반응/신중한 보도 필요>라는 소제목을 뽑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 힘을 얻기 위해 왜곡된 제목달기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중앙일보의 대표적 논객인 권영빈 논설위원은 7월 16일자 칼럼 <바람 바람 바람>)에서 우리사회엔 미풍·순풍이 사라지고 '북풍', '총풍', '의풍' 등의 바람이 이 사회를 일진광풍의 한가운데로 내몰고 있다며 △삼성차 처리 △두뇌한국21사업에 이어 세풍이 불고, '바람의 사회엔 소리없는 음풍이 불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권 논설위원은 그 음풍이 통상적 세무사찰이라는 이름의 '음해의 바람, 해코지 바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합리와 이성이 자리잡을 수 있는 미풍과 순풍의 사회를 기대한다는 것은 부질없는 소망인가" 라고 결론지었다.

이처럼 비유법에 의존, 간접적으로 비판을 가하고 있는 중앙일보에게 정작 '합리와 이성'을 기대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9월 들어 정부에 대한 정면대응을 시작한 중앙일보는 그러나 정치논리에 의존, '언론탄압' 으로 귀결하고 있으나 그 논리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면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출두현장 중앙일보기자 '격려인사'

자성의 목소리 없어

9월 3일자와 4일자, 10월 6일자 「김상택 만화세상」 은 중앙일보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신문인지 한 눈에 알게 해 주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9월 3일자 만평은 링위에서 국세청이 삼성을 검찰이 현대를 금감위가 대우를 '난타'하고 DJ와 측근들은 "'총선'때 우리 표"라며 즐거워 하는 그림이다. 그 링 위에는 "'선민 중산층' 위안의 날"이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지금의 경제개혁이 국민적 합의사항이라 할 수 있는 총체적 개혁과는 관계없이 국민의 정부가 단지 총선때 표만을 의식한 것이라는 것이 이 만평의 주장이다. 4일자 만평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인정사정 볼 것 없다' 촬영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부가 3대 재벌을 공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0월 6일자에서는 보광, 통일, KAL을 국세청과 검찰이 곤장을 때려 돈을 토하게 하자 수많은 군중이 둘러싸 즐거워 하고, 멀리 청와대에선 "'총선'때 과반수 확실!"이라는 멘트가 써 있다. 인민재판같은 느낌을 주는 이 링위엔 "'중산 서민층'만 보세요"라고 현수막이 그려져 있다. 지금의 경제개혁은 단지 중산층과 서민의 표를 의식한 인민재판이라는 것이 이 만평들의 주장이다. 이러한 만평의 내용들은 지금의 구제금융시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가장 많은 피해를 본 계층이 누구인지에 관심갖기 보다는 오히려 재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하는 정부비판에 중산서민층을 이용할 뿐이다. 더 나아가 구제금융시대의 주범인 그들을 변호해주고 있기까지 하다. 그 핵심인물이 바로 중앙일보 사주인 홍석현사장이라는 점에서 중앙일보가 누구를 위한 신문이지는 극명하게 드

러낸 셈이다.

지면 사유화 심각

국세청이 홍석현 사장을 고발한 다음날인 9월 18일 <국세청 발표에 대한 중앙일보의 입장>이라는 사고는 홍석현 사장의 혐의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 한다고만 밝히고 중앙일보가 언론탄압을 받고 있으며 '결연히 대처' 하겠다는 부분으로 지면을 채우고 있다. 지면에서도 혐의부분에 대해서 사과와 자성의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고 홍석현 사장의 해명과 표적사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다.

홍석현 사장의 소환과 구속이후로는 한층 논조가 공격적이며 지면사유화가 심해졌다. 10월 1일자 사설 「홍사장 소환과 우리의 입장」에서는 홍사장의 소환이 중앙일보가 정권에 비판적 논조를 견지해 왔으며, 옷로비사건, 손숙장관 격려금 사건 등으로 현정부를 비판했기 때문에 갈등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불법탈세혐의에 대한 조사를 정치논리로만 해석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같은날 「권영빈 칼럼」 <순망치한>은 아예 역사를 왜곡, 호도하고 있다는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 칼럼은 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의 예를 들며, 자사 기자들의 기자총회를 비교하고 있다.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기자들과 자사이기주의에 빠져 탈세범사장을 비호하는 기자들을 동급에 놓고 비교하는 중앙의 태도는 역사에 대한 망각이며 동아일보 해직 기자들에 대한 모독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이어 신문개혁을 내용과 형식에서 가장 강력하게 단행한 것이 중앙일보이며 그 개혁의 선봉이 홍사장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앙일보의 내용과 형식 모두 올 4월 삼성으로부터의 분리 선언 전후로 차이점이 없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소유구조 개편이후 36.8%를 소유함으로써 제 1대주주로 등장한 홍석현 사장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인척관계임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는 재벌에서 족벌로 옮겨간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20.3%의 주식은 (주)보광으로, 다시 유민문화재단으로 이전되었지만 유민문화재단은 중앙일보 창립자인 홍진기 회장을 뜻을 기려 지난 1월 창립된 재단으로서 삼성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구조 변화는 삼성으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으로 보기 어렵다.

내용상으로 보아도 중앙일보 지면 곳곳은 삼성의 영향력 하에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일례로 지난 6월 각 일간지에 기사화되었던 삼성자동차에 대한 삼성계열사들의 불법지원 기사가 중앙일보에서는 축소보도되어 비판받은 바 있다. 또 삼성으로부터 분리이후 중앙일보의 삼성계열사 광고게재량은 지난 해 10월~12월에 비해 767.5에서 910(단위 : 단)으로 늘어났다. (이상 월간 말 7월호, 민언련 신문분과, [재벌눈치보느라 흔들린 '독립언론' 맹세] 참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중앙일보는 사실상 삼성과 분리되지 않았으며 내용에서도 전혀 개혁적이지 못했다는 지적이 훨씬 더 설득력 있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길들여지면 다음은 다른 언론사 차례라며 언론계 카르텔의 동참을 요구하는 '순망치한' 의 논리는 다른 칼럼으로도 이어졌다.

10월 2일자 「글로벌 포커스」의 문창극 미주총국장은 「언론의 자유와 경쟁」에서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문제가 침해되고 있는데도 언론사 누구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 경쟁자가 받는 고통은 나의 행복이 되기 때문일까, 권력이 겁나서일까" 라고 언론계를 타박하고 있다. 게다가 작년의 최장집 교수와 조선일보의 논쟁때 "각종 재야 단체가 동원돼 조선일보를 공격했을 때 이를 언론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나선 한국언론은 하나도 없었다. 경쟁자가 받는 고통은 나의 행복이기 때문이었을까, 권력이 겁나서였을까" 라고 적고 있다. 이 내용은 마치 재야

단체를 자신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면 정권이 언제든지 동원할 수 있는 관변단체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했다. 더욱 눈여겨 볼 것은 실제로 중앙일보는 작년 '최장집 교수 사건' 당시 조선일보를 편들기는커녕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98년 10월 23일 「권영빈 칼럼」 <생사람 잡는 지식풍토>라는 칼럼이 바로 그 예다. 위의 칼럼의 논리대로라면 권영빈 논설위원은 조선일보의 고통이 자신의 행복이거나 권력이 겁났기 때문에 조선일보를 비판했다는 결론이 성립된다.

10월 2일부터는 연재된 <'국민의 정부' 언론탄압 실상을 밝힌다>는 박지원 수석(현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핵심에서 중앙일보에 대해 기사 및 논조의 교체, 구체적인 인사까지 요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권의 언론간섭의 실상을 담고 있는 이 기사는 그 자체로 매우 의미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중앙일보가 이 기사를 자사 사주구속에 대한 반발로 싣는 다는 것은 보복성 기사에 불과, 의미가 퇴색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 말미에서 중앙은 논조의 유지를 주장하는 데스크와 "곤란한 사정" 이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경영진의 내부갈등이 있었으며, "경영진이 편집간부에게도 밝히기 곤란한 사정은 정권의 세무조사가 시작되면서 더욱 깊어갔다" 고 밝혔다. 또 "기사 한줄 한줄에는 이를 취재 보도하기 위한 언론사 관계자들의 고뇌가, 때로는 말 못할 사연들이 숨어 있다" 고 기술하였다. 중앙일보의 '고뇌'가 '탈세'를 위한 것은 아닌지, '말 못할 사연들'은 '권언유착 기도' 가 아닐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10월 3일자 사설 「언론탄압에 분연히 맞선다-본사 홍사장 구속을 보고」 게재 이후 중앙의 지면 사유화는 극에 달했다.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이 홍사장으로부터 인사를 정부에서 원하는 대로 하고 정부에 협조하겠다는 제의했다는 기사에 대해 중앙은 10월 4일자에서 <"정부측 압력 인정하는 발언">(1면), <"오죽하면 인사 제의 했겠나">(4면), <정부 스스로 밝힌 언론탄압>(사설) 등의 기사를 통해 이것이 오히려 정부의 언론탄압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항변한다. 오죽 시달렸으면 정부에 인사권을 넘기겠냐고 강변하고 있지만 탄압을 받는다고 인사권을 넘기고 협조를 제의한 것이 과연 독립언론다운 행태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대담한 오보' 도 있었다. 중앙일보는 10월 1일자에 WPA의 서한을, 10월 2일자엔 IPI의 서한은 전문 번역과 함께 원문을 배경무늬로 깔아 게재하였다. 그런데 10월 6일에는 「국정홍보처 해명에 대한 IPI 서한」을 전문게재하였다고 밝혔으나 이전과 같이 원문을 배경무늬로 하는 그래픽을 선보이지 않았다. 이유는 자사에 불리한 부분은 아예 삭제했기 때문이다. "신문의 발행인이나 사장도 그러한 것에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전문'이라고 표시하여 게재한 것이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의 성명서를 자사에 유리한 부분만 보도하는 등 언론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양심과 자질을 의심케하는 보도 행태를 일삼았다.

'원만한 해결' 기대한 세계일보

중앙일보가 보광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며 강력히 대응했던 것과는 달리, 세계일보는 처음부터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유화적 제스처를 보였다. 「"누군가 통치권자를 오도하고 있다"」(7/5)는 여권 내부에서도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다는 내용으로 여권내의 합리적인 세력은 '원만한 해결'을 원하고 있으며, "이런 여권 내부의 합리적 의견이 어떻게 수용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로 결론을 맺었다. 원만한 해결이라는 것은 정치적 해결이며, 이런 권언유착을 원하는 것이 합리적 의견이라는 논리다. 그러나 이런 해결을 강력히 원하는 것은 여권내부라기 보다는 세계일보 자신으

로 보인다.

세무조사에 대해 중앙일보에서는 홍석현 사장이 구속되면서 전면전의 분위기가 감돌았으나, 세계일보에서는 뻐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10월 5일자 사설 「'국세청 발표'와 우리의 입장」에서 언론사의 세금관련 부실이 절대로 변명될 수 없으므로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책임을 감수하며 뻐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런 자성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순수성에는 의구심이 든다는 지적이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같은 날 실린 김승수 교수의 시론 「독립언론으로 거듭나라」는 세계일보에 대한 내용은 없이 중앙일보만을 거론하고 있다.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은 우습기까지하며, 그간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해 어떤 투쟁을 했는지 성찰하는 계기를 갖기를 기대한다고 적고 있다. 이런 지적은 온당한 것이지만, 왜 중앙일보만이 문제인지, 세계일보를 비롯한 다른 언론의 문제는 없는 것인지를 생각하면 세계일보의 자성이 진실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혹시 중앙일보 사태가 확대되는 와중에 세계일보가 자사의 문제를 은근슬쩍 넘어가려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비판적 논조 유지한 대한매일과 한겨레 그리고 경향

대한매일은 사설, 대한포럼, 데스크 칼럼을 비롯해 10여개에 달하는 논설을 통해 이 사건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사건 초반부터 이계홍 부국장의 데스크 칼럼 <언론횡포냐 언론탄압이냐>(7/5)를 통해 중앙일보의 논리를 논박했다. "그동안 독재권력, 부패권력에 협력하며 여론을 왜곡시키고, 때로 반민족적 반민주적 언론행태를 밟아온 타락언론 기생언론에 대해 세무조사든 불공정거래법이든 주어진 법테두리에서 과감히 시정해 나가야 한다. … 위선과 독선의 언론은 국민과 민족에게 누대에 걸쳐 독이 되기 때문에 청산은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며 강한 논조를 폈다. 10월 6일 장윤환 논설고문 역시 칼럼 <언론자유를 말할 수 있는 '입'>에서 중앙일보의 일부 경영진들이 현 중앙일보 사태를 74년 동아일보 광고탄압와 같이 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입이 있다고 해서 아무나 '언론자유'를 들먹일 수는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주장을 반박했다. 이외에도 기사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 이번 사건을 중요하게 다뤘다.

집/중/기/획 보광그룹·세계일보 세무조사 공방

중앙일보 "독립언론" 말뿐인가

"정부 총선겨냥 언론장악" 총공세
홍석현 사장 보광 3개사 최대주주
삼성 분리 '홈로서기' 허구성 입증

중앙일보 "총선用 표적 세무조사"

野 '언론 길들이기' 쟁점화

"정책론선 비판하자 세무사찰 칼 빼든 것"

"언론장악 음모 중단하라"

한겨레 역시 사설 칼럼 등을 통해 중앙일보의 논리를 비판했으며 대한매일과 달리 현 정부의 언론간섭에 대한 비판도 빼놓지 않았다. 사설 <탈세에 철저한 응징을>(7/1)을 시작으로 <언론사라고 성역일 수 없다>(7/3), <놀라운 언론사주의 탈세>(9/18), <개인비리와 언론자유신문>(10/4)등 일관된 논조로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10월 4일자 사설에선 "정부로부터 탄압을 당했다는 주장에는 큰 모순"이 있으며, "정말로 탄압이었다면 그때마다 투쟁하면서 언론자유를 지켰어야" 했다며 현재의 언론탄압주장을 일축했다. "권력에 굴종해 온 언론이 갑자기 언론자유의 투사로 변신할 수는 없는 노릇" 이라는 것이 그 이유였다.

9월 22일자 김근칼럼 <홍석현 사장과 언론자유>에서는 중앙일보사태에 관련한 사설이나 해설을 내보낸 신문, 방송이 적은데 그 이유가 '언론끼리 암묵적으로 맺은 카르텔적 현상의 표현' 이라고 언론계 전체에 자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한겨레는 해설기사와 언론비평을 통해 이번 사태를 단지 양비론적인 시각이나 사태전달에 그치지 않고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사가 많았다는 평이다.

경향은 대한매일, 한겨레신문에 비해 적극적인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양비론적 논조로 초점을 흐리지는 않았다. 사실 탈세에 대한 비판은 어느신문이나 이구동성으로 주장한 것이어서 중앙일보의 대응에 대한 평가가 이번 사안에 대한 각 언론의 입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9월 19일자 사설 <보광탈세와 '길들이기' 시비>에서 경향은 "그동안의 세무조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기에 이런 불신을 받게 됐는지 국세청은 깊이 반성해야 한다. 우리는 자유로운 언론활동과 기업차원의 탈세혐의는 별개의 문제로 다루어져야 하며 언론이 결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며 별개의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경향신문의 보다 분명한 입장은 10월 5일자 사설 <중앙일보 사태의 경우>에서 드러났다. 이 사설은 "우선 홍사장은 언론자유 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며 중앙일보의 언론탄압 논리에 일침을 가하고 있다. 또 "그 스스로 수사과정의 공정성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며 "중앙일보가 현 정부에 대해 얼마나 비판적 기사를 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구속의 배경이라고 연결할만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고 덧붙였다. 그리고 "정부의 신뢰성은 중앙일보가 제기한 문제에 대해 얼마나 설득력 있는 답을 내놓을 것인가에 달려있다" 고 맺었다. 이러한 논조는 두 개의 사안 즉, 비리척결과 언론탄압이라는 사안을 혼용해서 자칫 초점을 흐리는 다른 신문들의 양비론적 논조와 분명 다른 것이었다.

양비론에 빠진 나머지 신문들 - 조선, 동아, 한국, 문화, 국민

조선, 동아, 한국, 문화, 국민 등의 신문은 양비론에 빠져 사건의 초점을 흐리거나, 기사량이 사안에 비해 적어 동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조선일보는 10월 5일까지 사설로는 「홍석현씨의 문제」(10/4)만을 썼을 뿐이다. 다른 신문들이 탈세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한데 비해 '문제'라는 부드러운 표현을 썼다. 스스로도 논평을 유보해 왔다고 밝히고 그 이유를 두가지 관점에 대해 명확한 선을 긋기가 어려워서라고 설명했다. 그 첫 번째 관점은 언론사주라고 해서 탈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가이며 두번째는 홍씨가 중앙일보의 사장이 아니라 보광의 대주주였다 할 지라도 구속까지 됐겠는가라는 것이다. 중앙일보의 권언유착이나 지면의 사유화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 없이 철저히 '홍석현씨의 문제'만을 다루었다. 뒤이어 중앙일보가 주장한 언론탄압의 실상에 대해 '또 하나의 중대한 사회적 쟁점'이며 '독립된 의제'로 설정될 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전체 언론에 대한 '길들이기'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이러한 양비론적 태도는 자칫 본말을 전도하는 한편 억지주장을 펴고 있는 중앙일보에 대한 '동업자 편들기'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동아일보 역시 <세무조사의 앞과 뒤>(7/1)와 <'중앙' 홍사장 구속과 언론자유>(10/4)라는 사설을 실었다. 10월 4일자 사설에서는 조선일보와 유사한 논리를 폈다. 홍씨가 구속된 것은 불행하고 유감스

러운 일이지만, 정부의 언론탄압행위가 사실이라면 탈세범죄 못지 않은 또다른 차원의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다. 또한 동아일보가 "세계역사상 유례없는 광고탄압과 맞서 감연히 싸워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신문기업으로서 법적 도덕적 흠결없이, 양심과 용기를 좇아 언론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고 거기에 국민의 성원과 신뢰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자사의 자랑도 잊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일보 광고탄압을 이겨낸 것은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양심적 기자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자랑거리이다. 압력에 굴복, 기자해직에 대한 사과와 자성이 없는 자랑은 자사홍보로 밖에 볼 수 없다.

한국, 문화, 경향, 국민은 역시 사설이나 칼럼의 양이 매우 적었다. 양뿐만 아니라 내용에서도 양비론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줬다는 지적이다.

한국은 사설 <보광탈세와 조세행정>(9/19)과 <언론과 권력>(10/5)을 통해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정권의 언론탄압의혹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4일자 사설에서 한국은 중앙일보의 정부간섭과 보도굴절 사례 보도에 매달리는 것은 자신의 '흠결' 때문에 '양심선언'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10월 5일자 황태연 교수의 칼럼 <반개혁집단과 전화폭력>에서는 자신의 칼럼에 대해 전화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 대해 <역방향>의 전화폭력이라며 우리 사회가 아직 '열린 사회'가 되지 못했음을 밝히고 있다.

문화일보는 10월 5일자 사설 <보광과 언론과 권력>에서 홍석현 사장의 탈세보다는 정부의 언론탄압을 주의제로 삼고 있다. 지금의 논란이 "후진적인 '갈등'"이라며 개탄하고 중앙일보측의 대응관행이 "공개사회의 투명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도 결론은 "(정부의 핵심인사의 폭언 폭행의) 높은 개연성에 주목하는 우리는 법적·정치적 문책여부를 주목하고자 한다"며 정부를 한층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일보는 10월 5일자 사설 「홍석현 사장 구속 파장」을 통해 정부의 언론통제기도 의혹을 반드시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석현 사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정부가 주장하는 '해명과 항의'가 받는 사람에게는 압력이 될 수 있으므로 시정과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야 한다고 부당한 압력은 없어져야 하겠지만 국민을 비롯한 다른 신문들이 이번 사건에 대해 공식적인 논평을 하고 있지 않다가 중앙일보의 압력 폭로 이후 일제히 사설을 통해 양비론을 펼치면서 진상규명과 책임을 논하는 것은 순수하게 '언론자유'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중앙의 폭로이후 많은 신문들이 사설을 통해 양비론을 펼치는 것은 부득이한 면이 없지 않다. 그러나 이전에는 아무런 비판없이 있다가 양비론을 펼칠 수 있는 증거가 생기자 사설을 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큰 영향력이 있는 중앙일보가 그러했을진대 다른 신문사에는 압력이 없었겠는가라는 의구심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 다른 신문사에도 그런 압력이 행해졌다면 그것을 밝히고 독자들에게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를 먼저 하고 논조를 펴나가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의 예만을 들며 진상규명과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조선을 비롯한 몇몇 신문들의 때늦은 양비론 사설은 동업자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궁정동 그자리 지금

사해현장 공원으로 조성
여사지장소 푯말도 없어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평가

경향,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왜 또다시 박정희인가?

지난 5월 13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와의 화해'차원에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고지원금 100억원이 기념관 건립 예산으로 확정된 상태다. 당시 "내가 과거에 박해도 받았지만 다 청산하고 박전대통령과 오늘 다시 화해하고 다시 한번 내 입으로 그분을 재평가해 기념사업을 하는 것은 나에게도 뜻이 있고 기념사업을 추진해온 분들도 감회가 클 것" 이라는 김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역사를 만들지 않고 과거와의 화해를 시도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은 다분히 대구·경북 지역을 겨냥한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지적이다. '과거와의 화해'는 김대중 대통령 개인의 화해일 뿐 역사적 화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 또 정치권이 '박정희 재평가'라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표와 관련한 일련의 평가작업들을 나름대로 늘어놓아 다분히 정치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는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 10월 25일 학계 일각에서 기념관 건립과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는 등 반발이 심하게 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10·26 20년을 맞는 시점에서 이러한 박정희 재평가 및 기념과 건립에 대한 일련의 흐름에 대해 언론은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를 하기보다는 눈치보기에 바쁜 인상을 주고 있다. 공(功)과 과(過)의 양비론적 입장만 보일 뿐 왜 다시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가 대두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입장을 찾아보기는 어려웠다.

겉으론 양비론, 암묵적으로는 기념관 건립 찬성하는 대한매일

대한매일은 전체적으로 박정희 전대통령의 기념관 건립과 역사적 재평가에 대해서는 공(功), 과(過)에 대한 찬성·반대의견을 대등하게 다루었다. 이러한 입장은 현 정부의 치적을 나열하기에 급급한 태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을 샀다. 그 이유는 김대중 정부의 과거청산 작업과 동시에 박정희 기념관 사업에 적극 나섰다는 것, 어느것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모두 치적으로 나열하기에 급급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우선 박정권 탄압사례 등을 열거하면서 피해자들 명단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특히 장준하 의문사, 최종길 서울법대교수사건, 동백림 사건, 김형욱 전중앙정보부장 실종사건 등에 대한 재조사 작업이 현정부 들어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역대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보였는데 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활기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있는 상태며 정기국회 때 통과 예정에 있다는 것이다..

유승남 국민대 교수가 <박정희 리더십의 '이중성'>라는 제목으로 특별기고한 글에서는 박정희 전대통령을 현실주의 리더십, 이상주의 리더십, 창조적 리더십 중 "이러한 리더십 유형에 비추어 박정희 전대통령은 현실주의 지도자였음이 분명하나 창조적 리더십의 특성도 부분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라면서 구분 짓고 있다.

그리고 경제성장 지상주의 정책은 긍정적(농업사회를 산업사회로 이행하는 계기마련)으로, 선성장 후분배 정책은 부정적(경제불평등, 재벌에 집중된 자본, 다원화되어 가는 시민사회 강압적 통제)으로 설명하고 있다.

반면 근대화 정책에 있어서는 정치영역에서 두드러졌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결국 박대통령은 권위주의 체제로 역행한 잘못을 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3선개헌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현실주의자 였으며 근대화를 경제적 측면에서 극한시키면 어느 정도 창조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철저히 공과 과를 구분지으면서 잘못은 인정하되 계승할 부분은 인정을 해주자는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얘기하고 있다. 이는 "60년대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관주도의 경제정책과 선성장 후분배정책이 최선의 것이었는가는 먼 훗날 역사가 평가할 몫이다" 라면서 현재의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

10월 26일자 에서는 <'기념관' 찬반론속 추모행사 성황>이란 제목으로 어록출판기념회가 성황리에 치뤄졌다는 보도를 크게 다루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에 대한 교수들의 반대기자회견은 축소보도된 느낌을 받는다.

대한매일은 10월 25~26일자에서 기획시리즈로 <박정희 전대통령 서거 20주년>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했는데 한국일보와 비중을 비슷하게 두었다. 현 사안에 대한 논쟁들만 부각시켰을 뿐 심층성은 부각되지 않았다.

박정희 미화작업에 열올린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박정희 관련 보도를 미화된 느낌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박정희에 대한 향수(그리움)를 느끼게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정확한 논조가 없으며 기사내용과 제목의 부조화도 볼 수 있다. (기획면은 논조없는 기사, 반면 문화면 기사는 느낌으로 박정희를 전달하려는 편집의 격상된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다)

'10·26' 20주년 다시보는 朴前대통령

10월25일자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 인터뷰기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박정희 전대통령은 '독재자이자 영웅' 이었다고 했다. 인터뷰는 노근리에 대한 키신저 전 미국무장관의 입장을 밝힌 내용이었으나 제목은 의외로 <박정희는 독재자이자 영웅>으로 되어있다. 기사내용과 제목의 불일치를 볼 수 있다. 또한 박정희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외국에서도 그가 영웅이었다는 평가와 독재자였다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그는 인권정책에는 문제가 있었지만 유례없는 경제성장책으로 타 국가 경제개발의 모델이 되고 잇다." 면서 박정희를 평가했다.

10월26일자에서도 박정희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편집과 사진, 기사가 강하게 느껴진다. 1면 사진기사(10.26 20주년 다시보는 박전대통령)를 보면 세종홀에서 열리고 있는 '박정희 사진전'을 찾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박정희가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같은날 5면에는 <박정희 잔잔한 추모행렬>, <박정희 재평가 여·야 엇갈린 속내>의 기사가 실렸는데 박정희 어록집 출판기념회내용을 잔잔한 추모행렬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제목과는 다르게 기사전반적인 내용은 참석자들 명단과 어록집 출간 기념 건배사진이 실려있다. 정치인들의 총선을 겨냥한 참여인상을 느낄 수 있다. <박정희 재평가 여야 엇갈린 속내>라는 기사에서는 박정희 전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재평가는 박전대통령의 공(功), 과(過)에 대한 견해뿐 아니라 정파적·정략적 동기까지 겹쳐 매우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국민회의의 대구·경북을 의식한 기념관 건립사업, 자민련의 박전대통령의 업적 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 한나라당의 대구·경북 민심을 고려한 어정쩡한 모양새를 지적하고 있다.

<궁정동 그 자리 지금은 돌담>에서는 시해현장 장소가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으나 역사적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푯말도 없는 것이 안타깝다는 내용이다.

한국일보의 박정희에 대한 미화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10월26일자 문화생활면에서는 전면을

박정희 잔잔한 추모행렬

■ 오늘 서거 20주기

어제 어록출판기념회

여야대표등 정치권 발길

오늘 국립묘지 추도식

각계서 대거 참석예상

[illegible]

모습을 나타냈다. 여야 모두 추모행사에 잔잔한 관심을 표시한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화운동 탄압이란 과오를 지녔지만 근대화의 초석을 깐 인물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나름의 관심 표명은 보수층과 대구·경북 유권자들에게 「박정희 향수」가 먹혀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어 26일 오전 동작동 국립묘지에서는 대규모 추도식이 거행된다. 「민족중흥회」 주도하에 22개 관련단체가 참여한 「박대통령 제20주기 추도위원회」가 추도식을 주관한다. 추도위 고문을 맡은 최규하(崔圭夏) 전두환(全斗煥) 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등 각계인사 5,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주최측이 밝혔다. 하지만 재임중 「5·16은 쿠데타적 사건」이라고 규정했던 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은 추도위 고문 명단에 들어있지 않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박정희 어록집 출간 건배

2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박정희전대통령 어록집 출판기념회에서 참석자들이 건배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신현확 전총리,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대행, 한나라당 박근혜 부총재, 남덕우 전총리, 윤주영 전문공부장관, 고건 서울시장.

/손용석기자

박정희관련 기사로 보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10·26사태 20년 지났지만…박정희 평가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제목은 전체적으로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미대통령 기념관 자료의 중립성 엄격>이라는 기사에서는 미국에서는 10여 명의 대통령 기념관이 건립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목포대 박찬승 교수는 "미국 대통령 기록관은 중립적인 전문 자료관리자들이 전시 내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적을 칭송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기념관이 아니라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들을 가감없이 체계적으로 한데 모은 자료실의 역할이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라며 기념관 건립의 방향성을 언급하고 있다.

<연극 인간 박정희 성황>이라는 기사에서는 최근 논쟁이 뜨겁게 일고 있는 박전대통령에 대한 모습들이 연극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여론도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표얻기 위한 재평가 정치인들이 앞장서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박정희가 정치적으로(선거관련) 장사가 되는 것으로보고 있다. 왜 '박정희' 에 대한 공과 과만이 문제가 되는가?, 지역성과 맞물린 재평가가 항상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김대중대통령이 대구·경북지역을 방문하면서 지난 5월에 '박정희 대통령과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여론은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냐" 라는 의문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번 어록집 출판기념회 자리에서도 정치인들의 표 얻기 위한 발걸음이 바빴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비판적 시각보다는 단순보도형태를 통해 암묵적으로 정치인들의 행보를 봐주기 위한 언론사의 보도 행태를 엿볼 수 있었다.

특히 경향신문은 10월26일자 정치면에서 <동상이몽>이라는 사진기사와 함께 하단에 <박정희 있은곳 표가 있다>라는 기사를 실었다. 사진은 박정희 전대통령 어록 출판기념회에서 국민회의 이만섭 총재 권한대행,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행사를 주관한 윤주영 전문공부장관을 사이에 두고 얘기하는 장면이다.

기사내용은 정치권 인사들이 출판·추도식 행사에 총선을 대비한 표를 의식 북적거렸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들은 저마다 박전대통령 재평가를 합창하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정희 향수'에 젖은 보수세력과 TK(대구·경북)민심을 사로잡기 위한 '구애작전'을 벌여 격세지감을 느끼게 했다"라면서 정치인들의 참여를 표얻기 작업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가 가난 속에서 허덕일 때 '우리도 하면 된다' 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경제발전을 일궈냈다며 박전대통령의 근대화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면서 '박정희 재평가'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전·현직 정치인 등 5천여명의 추모객들이 몰릴 것이라고 했다.

기사의 절반가량이 출판기념회에 참여한 인물들을 나열하는데 할애되었으며 박정희 재평가에 대한 심층성있는 기사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에 부정적인 한겨레와 적극 찬성하는 조선일보

▲ 한겨레 - 박정희 기념관 짓지마라

10월25일자 만평에서는 <박정희기념관 짓지 마라>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및 교수들의 주장을 김대통령이 싫다고 하는 내용으로 실렸다.

10월26일자 사설에서는 <10·26과 박정희 기념관>이라는 제목으로 20돌을 맞는 10·26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또한 한겨레는 "10·26은 역사속으로 사라진 사건이 아닌 앞으로도 부단하게 재음미해야 할 화두" 라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박정희증후군'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맞춰 추모사진전, 연극, 출판기념회 등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추모행사 규모도 여느 때보다 커질 것이라고 했다. 이는 김대통령의 동서화합 노선이 작지 않은 구실을 했기 때문이며 유신시절 최대의 피해자중 한사람인 김대통령이 이렇게 나오자 박전대통령의 치적을 공공연하게 선전하려는 사회적 기운이 일게 된 것을 지적했다.

또한 기념관 건립과 관련 김대통령 개인의 화해를 위한 노력일뿐 그 당시 유신독재와 싸우면서 희생을 치렀던 민주세력들의 거센 반발과 그들 전체의 화해는 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는 "우리는 김대통령의 지역화합을 위한 노력에는 얼마든지 찬성한다. 그러나 박전대통령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역사에 맡겨야 한다. 지역적으로 화합한다거나 과거와 화해한다는 명분으로 현직 대통령이 긍정쪽에 무게를 두어 평가하고 기념관 건립에 국민의 세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위험스런 일이다" 라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백범 김구선생 기념관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이 어려움에 봉착한 현실을 생각하면, 박정희 기념관 건립지원은 더욱 이해하기 어려다" 고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또 "박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지나치게 성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먼 훗날 오점을 남길 수 있다는 것" 을 강조했다. 정치적으로 화합과 화해를 추구하는 일이 역사의 정통을 세우는 일에 앞설 수 없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다.

10월26일자 집중기획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정리했는데 <기득권층 '신화만들기' 열올려>, <영남권 감싸안기 화해손짓>, <기념관 설립 논의 자체가 참담>, <정치상황 편승 잇단 기획행사>등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다.

<기득권층 '신화만들기' 열올려>에서는 적지않은 사람들이 박정희를 '근대화의 아버지'로 지칭하면서 추모·추앙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왜곡된 현상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과연 올바른 것인지를 짚어주고 있다.

또한 <영남권 감싸안기 화해손짓>기사에서는 김대통령의 박정희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영남권 표를 의식한 화해의 손짓이라면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이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 강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는 김대중 대통령의 박정희 전대통령과 관련한 발언들을 열거하면서 구체화하고 있다.

다른 신문과는 다르게 역사학자들의 반대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는 기사를 심도있게 다뤘는데 "이런 토론회를 열 수밖에 없는 시대상황 자체가 우리의 역사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참담함을 느낍니다" 라면서 기념관 건립지원 철회에 대한 간접적인 주장을 펴고 있다. 박대통령 어록집 출판기념회와관련해서는 현 정치상황에 편승한 행사로 규정하고 있다.

▲ 조선일보 - 박정희 기념관 건립은 계승적 차원에서 바람직

10월26일자 사설 <박정희 기념관>에서는 '박정희 기념관' 논란을 여론의 박정희 신드롬 및 여론조사의 재평가 결과를 운운하며 정당화 및 필연적인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외국사례를 들면서 대통령들의 전체기념관을 짓는 것이 마땅하나 박정희 신드롬이 일만큼 박정희에 대한 인기도가 높기 때문에 기념관 건립은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조선일보는 기념관 건립은 국고보조 여부와는 별개라도 추진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공과에 대한 논쟁도 기념관 건립의 걸림돌이 되

리라고도 보지 않는다는 입장인데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은 공이 있어야만 세우는 것이라기 보다는 그의 재임중 통치철학과 방법이 현대사에 끼친 명암을 되새겨보는 데 의미가 있다. 공은 공대로 평가하면 되고, 과는 과대로 역사에 되풀이되지 않도록 교훈삼으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과를 아울러 조명함으로써 현대사의 산 교육장으로 삼자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라는게 조선일보의 입장이다. 조선일보는 박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의 필요성을 역대 대통령의 기념관 건립과 결부시켜 정당화 시키고 있는데 이는 "순서대로라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부터 건립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역대 대통령중 '가장 존경하는 인물' 로 지목되는 등 그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우리 사회에 '박정희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라면서 자라나는 세대에게 국가적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르칠 수 있을지 부끄러울 뿐이라고 한다.

이러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고려해서라도 박전대통령의 기념관 건립은 빠른시일내에 시행되어야 하고 이승만 대통령의 기념관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10월26일자 김일영(성균관대 정치학)교수의 시론 <박정희, 어떻게 볼것인가>에서는 박정희 재평가가 갖는 이중적 논의 중에서 경제개발 논리에 역점을 둔 평가만을 하고 있다. 반면 인권적 탄압이나, 민중·노동자들의 탄압에 대해서는 무시를 하고 있으며, 여론을 의식한 당시 시대상황논리만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박대통령을 평가할 때, 우리는 '맹목적 부정'과 '맹목적 향수', 그리고 '정략적 평가'라는 세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 고 주장하는데 그 근거로는 '맹목적 부정론'은 흔히 오늘날의 모든 잘못과 악의 근원을 박정희 개인 또는 그의 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는 논리로 연결되곤 한다면서 이러한 '박정희 환원론'내지 '박정희 원죄론' 식의 논법은 산업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문제까지도 모두 그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라는 것이다.

또한 '맹목적 향수론' 은 그에 편승하려는 정치세력들에 정략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오늘날 대구·경북 지역의 표심을 노리는 몇몇 정치세력들이 갑자기 박대통령을 치켜세우면서 그에 대한 이 지역민들의 향수에 영합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한 박대통령을 보다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항상' 병행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어도 산업화 초기단계에서는 국가주도형 성장이 보다 효과가 있었으며, 그 경우 국가는 일반적으로 민주적이기 어려웠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이유로 "당시 시점에서 '빵'과 '민주' 는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가치선택의 문제였다. 그 무렵 사람들에게 빵은 민주라는 가치를 의미있게 만드는 전제였을 수도 있다. 이 점을 무시하고 정치를 지나치게 도덕의 관점에서만 재단할 경우, 국민들은 정치 혐오증에 빠질 수 있다" 는 논리로 그 당시 행해졌던 인권탄압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들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조선일보는 현실적 안목에서 박대통령을 평가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그럴수 밖에 없었던 박대통령을 이해하고 평가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다.

10월26일자 기획기사 <'박정희 정신' 계승이냐 극복이냐>에서는 계승적 의미를 더 부각시키고 있다. 계승의 근거로는 박전대통령이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과감하고 실용적으로 풀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는 대우경제연구소 이한구 소장과 연세대 사회학과 송복교수의 말로 대신하고 있다. 먼저 이한구 소장은 "미래를 위해 현재의 고통을 과감하게 감당해야 한다는 인식을 정확히 하고 이를 밀고 나갔던 점, 우리도 한번 해보자는 자립정신을 일깨운 점 등을 계승해야 한다" 는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의 리더십이 없었더라면 지금 우리사회 수준이 이정도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송복교수의 말을 빌면 "박정희 대통령의 시대만큼, 권력이 사회목표와 국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해 국민을 합심시켜 나갔던 시대는 없었다면서 지금은 그걸 잃어버렸다" 고 현 정치를 비판했다.

반면 계승보다는 극복의 문제에 무게를 두는 견해도 적지않다고 하면서 인권탄압과 개발독재의 후유증에 비판의 핵심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전임대통령 중 그나마 '잘못된 확신'이라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박대통령뿐" 이라면서 계승의 의미를 부각시키고 있다. 즉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질적 근거제시는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딸인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의 인터뷰를 통해 <근면한 국민성 키운 것이 아버지의 최대업적>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2. 경제적 업적에 적극동조한 모습 독자들 판단 흐리게해 (경제적 업적은 인정하나 유신독재는 인정못한다는 논리)

경향신문은 10월26일자 오피니언란에는 김충일 논설위원의 <박정희시대의 극복>이라는 칼럼을 통해 현 3김이 박정희의 2세대라고 보며 이는 이들이 박정희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 박정희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김영삼 전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상반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글을 결과부터 얘기하면 무엇을 말하려는지 의도가 불분명하다.

김충일 논설위원은 3김씨를 '박정희의 2세들' 이라고 보는 이유를 상속의 관점이 아니라 3김씨, 특히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른 김영삼, 김대중 두사람이 얼핏얼핏 보여주는 '박정희 콤플렉스' 의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그들은 박정희와의 역사 평가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는 무기로 '민주화' 기치를 내세워왔다. '개발독재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더 나았을 것이다'며 박정희 시대를 평가절하해 왔다. 그러나 그같은 주장은 가설일 뿐이므로 설득력에 한계가 있다" 는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부분적 화해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김영삼 전대통령이 박정희를 평가절하했던 것보다는 나은 모습이라고 보고 있다. 이 칼럼에서 김충일 논설위원은 김대중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박정희에 대한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접근이 성숙한 극복자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10·26과 관련한 언론사의 보도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이외에는 명확한 자사 논리가 없었다. 사설이 조선일보와 한겨레 신문에만 실렸다는 것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또한 기념관 건립 반대에 대한 보도가 없거나 적은편이다. 언론의 비겁한 태도 및 회피성을 엿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박정희 전대통령 재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역사적 입장에서 접근하려는 노력보다는 단지 현실정치와 결부시켜 평가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으며 경제와 정치적 평가를 임의로 구분지어 독자들이 알아서 판단하라는 식의 보도행태는 언론자신들이 결정적 책임을지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IMF를 맞은상황에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업적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통해 대리만족을 행하려는 의도도 보이고 반면 정치적으로는 유신독재를 평가하면서 현정부의 정통성을 찾으려는 김대중 대통령의 의도도 보인다. 물론 자민련의 적극적 자세와 한나라당의 어정쩡한 자세도 박정희에 대한 평가가 곧 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원칙없는 입장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론은 대부분 양비론적이거나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취했는데 이는 언론의 무책임함과 이번 일을 회피하려는 자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정희 기념관 건립 및 국고지원을 반대하는 전국 역사학자 모임'에 참여했던 한양대 사학과 임지현 교수는 "정부 주도로 기념관을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의 역사이해를 정부가 지배하겠다는 의도로 읽힐 수밖에 없으며, 미래를 지향하는 기억으로서의 역사는 국민들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지, 권력이 강제하는 공식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권력에 의한 과거와의 화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고속압축형 경제성장으로 한국경제를 선진국 초입의 반열에 올려놓은 인물이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그가 행한 인권탄압과 민주주의 말살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그 시대의 경제성장이 극도로 열악한 산업현장에서 헌신해온 노동자들의 몫이라는 견해도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소극적 자세로 일관한 중앙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0월26자 사회면에서 단순 사실보도에 그쳤다. 또한 기념관 건립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을 대등하게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10·26' 20주기…박정희 평가 두얼굴>란 제목의 글을 보면 동아일보의 입장은 박정희 전대통령을 추모하는 어록 출판기념회와 한편으로는 역사학자들이 박전대통령 기념관 건립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대등하게 보도하고 있다. 사설이나 칼럼기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동아일보의 입장을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기념관 건립과 관련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무책임성을 볼 수 있다.

이는 중앙일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중앙일보는 다른 신문들과는 달리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 어록집 출판기념회 관련 기사와 박근혜 한나라당 부총재의 인터뷰만 간단하게 실었을 뿐 칼럼이나 기획기사를 통한 심층적인 지면할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노동관련 보도 모니터Ⅳ-4

악숙강식 꼬봉언론

99년도 -우리에게 노동문제가 유난히 크게 다가온 한 해였다. IMF이후 노동자들은 생존권조차 보장받지 못한 채 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나 생존권 수호를 위한 약자의 파업에 자본이라는 이름의 강자는 경제회복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철퇴를 가했다. 자본주의라는 냉혹한 정글에서 언론은 철저하게 자본에 빌붙었다. 노동자를 제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기주의의 표본으로 왜곡한 언론은 말 그대로 정권과 재벌의 꼬봉 노릇에 충실했다. 이제 이 땅에서 노동자란 더 이상 너와 나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 언론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이 단결해서 경제발전 저해하는 노동자들의 버릇을 고쳐놓아야 한다고 말한다. 정권과 재벌의 구미에 맞게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오랜 꼬붕의 연륜으로 보자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99년-곡필의 역사. 청산은 멀었다.

악숙강식 꼬봉언론
▶ 지하철 파업관련 보도
▶ 조폐공사파업보도 관련 보도

지하철 파업 관련 보도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겨레, 한국
KBS, MBC 9시 뉴스, SBS 8시 뉴스
4월 15일 - 5월 1일

4월 26일 밤 지하철노조가 전격적으로 파업 철회를 선언하고 직장으로 복귀함으로써 8일간의 파업이 끝났고 시민들은 정상적으로 운행되는 지하철을 타게 됐다. 그러나 사회의 반목과 갈등은 사그러 들지 않을 전망이다. 파업이 철회된 이후에도 지하철공사와 서울시 측은 현 집행부와의 협상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지하철 근무현장에 경찰과 군인들이 상주하고 있어 '계엄상태'를 방불케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한겨레신문 5월 1일 사회면)

또 철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사설들이 계속 실리는 등 언론의 보도태도는 공정성 상실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언론은 파업 당시부터 노동자들에 대한 악의적 왜곡보도를 일삼으며 '일반시민들을 볼모로' 하는 보도로 노동자들을 고립시킨 바 있다. 기자 역시 노동자이고 언론계 역시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지금 이러한 편파적 보도가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지 의문이다.

이번 파업과 관련한 보도는 크게 두 가지 양상을 보였다.

첫째, 언론은 노동자들의 파업이 불법성과 집단이기주의라며 노-정간의 대결양상으로 보도하던 초기 태도에서 한 걸음 나아가 파업을 비판하는 시민의 주장을 집중 부각 보도했다. 이를 통해 시민과 노조의 대립을 조장하고 노조를 고립시키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모든 언론에서 나타났는데 비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단순 보도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언론이 시민과 지하철 노동자를 분리시키려는 강한 의도가 드러난 것이다.

조선일보는 22일자 사설 <시민들이 견뎌야 파업 끝난다>에서 "파업이 장기화되고 운행

社說

시민들이 견뎌야 罷業 끝난다

이 중단되더라도 이를 악물고 참아내자"며 "그래야 시민을 볼모로 걸핏하면 벼랑 끝으로 치닫는 노조의 의도된 전술을 극복"해낼 수 있다고 대립을 부추겼다. 한국일보 역시 23일자 사설 <지하철 파업과 시민저항>를 실었다. 제목에서부터 파업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을 '저항'으로 의미부여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 반드시 지하철 노조의 버릇을 가르쳐 주자는 무언의 메시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각 신문의 사회면은 분노하고 항의하는 시민들로만 채워졌다. 노조는 이미 대화의 상대가 아니라 '걸핏하면 벼랑 끝으로 치달아 버릇을 가르쳐'야 하는 적대적 존재로만 그려졌다. '백기투항'이니 '점령'이니 하는 용어와 노조와 전면전을 치르는 듯한 분위기 속에서 파업을 이해한다는 주장은 한겨레를 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방송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연운행이 진행되던 4월 15일 MBC는 "운행차질 불가피"(4/15 9시 뉴스)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지연운행으로 2호선 삼성역에서 승객들이 항의하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어요. 하지만은 불법적으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원칙적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합니다."라는 일반시민(오길환(회사원))의 인터뷰를 보여주었다. 17일 <지연운행에 시민분노>도 비슷한 내용이다.

SBS와 KBS 도 각각 16일과 17일 <지연운행에 '분통'>, <시민들 화났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특히 KBS는 22일 <퇴근길 비상>, 27일 <시민지지 없으면...>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강조했다.

물론 시민들이 반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만일 파업의 배경을 시민들이 알았다면 반응은 달라질 수 있었다. 언론이 알려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와 왜곡으로 일관하는 직무유기를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악의적인 왜곡보도

언론은 또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대서특필하거나 왜곡을 일삼아 노조의 도덕성을 흠집 내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20일 방송뉴스와 21일자 신문에 보도된 '고의고장' 의혹.

이 보도는 '인위적인 요인에 의한 고장'이라는 공사 측의 주장과 이에 기반한 검찰의 발표를 토대로 하여 노조 측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조가 운행을 방해하기 위해 고장낸 것처럼 의혹을 부각, 이 사건을 다룬 신문의 경우는 사회면 머리기사로 다루었다.

한편 KBS와 MBC는 이 내용을 공사 측과 노조 측의 주장을 같이 균형 있게 보도, 편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그러나 SBS와 주요신문들은 공사 측의 주장을 비중 있게 다루며 노조 측이 고의고장을 일으킨 듯이 보도했다. 특히 중앙일보는 <일부러 고장냈나 검찰 '지하철 노조 운행 방해' 의혹 조사> 로 제목을 달았고 SBS는 노조 측의 주장은 전혀 제시

하지 않은 채 "… 인위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증거라고 지하철 공사는 밝혔습니다"라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공사 측에서 근거로 제기한 유면계 파손이나 배터리 방전 등은 대체 투입된 인력의 정비 불량이나 성난 시민의 화풀이인지, 또는 단순 고장인지 아니면 노조가 고의적으로 그런 것인지가 검찰이 조사에 나선 지 일주일이 지났으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의 언론들은 "전동차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운행 중 고장이 나도록 손을 댔음이 틀림없다"는 공사 측의 주장을 부각시킨 것이다. 마치 노조가 목적달성을 위해 시민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도덕 불감증 부리처럼 그리고 있다.

두 번째, 언론은 규찰대 등의 소수 열성노조원이 기관사 등을 억지로 감금하고 일부 조합원들의 경우, 복귀하면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억지로 파업하는 것처럼 보도하였다. 대표적인 신문은 대한매일과 조선일보다. 대한매일은 22일 『노조 규찰대 조직 이탈 막기 급급 / 기관사 등 핵심 노조원 1200여명 감금상태』라는 기사를 썼다. 조선일보 역시 『"규찰대가 기관사 복무 막는 듯"』이라는 제목으로 다루었고 검찰의 말을 인용, "지하철 정상화에 꼭 필요한 기관사 300여명의 업무복귀를 규찰대 등이 막고 있어 사실상 감금상태"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또 복귀 노조원을 '왕따'시키기 때문에 원치 않는 파업을 하고 있다는 류의 보도 역시 지나친 과장보도라는 지적이다. 동아 21일자에는 『"피 말리는 하루하루 파업 빨리 끝났으면 "어느 지하철 노조원의 고뇌』라는 제목아래 "평소 친하던 동료라도 [변절자]에게는 아예 아는 체를 하지 않고 [왕따]를 시키는 데 누가 이같은 [집단 이지메]를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라는 기사가 실렸다. 이와 유사한 기사들이 조선 23, 24일 중앙 23, 27일 대한매일 22. 24일자 등에서 보도되어 파업의 부당성을 간접적으로 옹변하고 있다.

MBC도 4월 24일 <최장 파업될 듯>이라며 94년과 복귀율을 비교한 데 이어 "지하철공사는 노조원들의 업무 복귀를 막고 있는 규찰대 24명의 명단을 확보해 서울 경찰청에 범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그러나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라고 해 공사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KBS의 보도는 여러 신문, 방송 중 가장 악의적이었다. 4월 23일 <"복귀 방해" "자진파업">이라는 제목으로 균형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보도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이날의 리포트 내용을 보자. 먼저 김상협 기자의 다음과 같은 리포트로 시작되었다.

『노조 지도부가 닷새 째 농성을 하고 있는 명동성당에 기관사 4백 여명이 함께 있습니다. 좁은 장소에 유난히 기관사들만 모아 놓은 것은 이들이 이탈할 경우 파업의 힘이 그만큼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만큼 기관사들에 대한 통제는 상상 이상이라는 것이 사 측의 주장입니다. 』

이어 "외출을 통제하고 또 5명을 묶어서 한 조를 만들어서 서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도명정 서울시 비상수송대책본부 실장의 인터뷰가 있었다. 그리고 김 기자는 "또 다른 농성 현장인 서울대에는 업무 복귀자의 명단이 날마다 공개됩니다. 파업 대열을 이탈하기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라며 " 노조 측은 어떠한 강제행위도 없다고 주장합니다"라고 덧붙였다. 지하철 노조의 서형석 대변인의 이어지는 인터뷰 내용은 시청자에게 단지 그들만의 '주장'으로 전달될 뿐이었다. 게다가 "그러나 벌써 닷새째인 파업에 상당수 노조원들이 지쳐있습니다"를 기자의 리포트와 파업 노조원의 인터뷰가 이어져 강제행위에 힘을 실어 보도하고 있음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90%가 넘는 높은 지지율속에서 9000여명이 결의한 파업이 규찰대의 강요에 의해 유지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또 공사나 시 측에서 가족들을 상대로 복귀를 종용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했는데 그것은 괜찮고 노조가 조직적으로 이탈방지에 노력하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는 식의 보도가 과연 공정한 보도인지 의문이다.

반면 한겨레 22일자에 『면직 갈림길... 긴장 속 농성』이라는 기사에는 "가려면 담을 넘어서라도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다...다들 고생하는데 혼자 집에 돌아간다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는 기관사 김 아무개씨의 인터뷰가 보도되어 대조적이었다. 상식적으로 농성 인원이 총1200명인데 그다지 넓지도 않고 개방된 공간인 성당에서 300명 인원이 감금됐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귀율 조작의 의혹도 밝혀져야 할 부분으로 남아있다.

복귀율 조작의혹 밝혀져야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에 의하면 지하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 비 조합원 간부들(특히 지하철 노조에서 입수한 복귀자 명단에는 지하철 공사 사장의 이름까지 올라 있었다고 한다), 한번 복귀 후 다시 이탈한 경우에도 복귀한 것으로 계산, 가족들의 '복귀 설득하겠다'는 말에 근거한 계산 등 실로 복귀라 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다. 민주노총이 집계한 수치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일부 악의적 왜곡보도는 언론중재위에 신청된 상태다. 참여연대는 이 단체 정책실장의 발언을 ' 파업을 철회하라'고 한 것으로 전달한 동아일보의 보도가 왜곡되었다며 언론중재위에 중재 신청했다. 또 시민단체인 YMCA 역시 문화일보를 상대로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 문화일보 4월 20일자 <파업 중단 ... 대화로 해결>는 YMCA등이 참여한 '시민연대회의'가 파업철회하고 대화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연대회의'라는 단체를 알지도 못할 뿐더러 그런 입장을 보인 바 없다는 게 YMCA의 주장이다.

인터뷰를 통한 상황 왜곡까지

4월 24일 "겉으론 평온"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된 박범수 기자의 리포트는 PC통신과 대학가의 자보를 통해 왜곡으로 드러났다. 이 날 박범수 기자는 서울대의 농성현장을 리포트 하면서 대체로 평온하지만 공권력 투입에 대한 긴장감이 베어있다고 하면서 주말을 맞아 농성장을 방문한 가족과 재회를 하는 장면을 리포트하며 박덕남씨 부부를 인터뷰 했다. 인터뷰에서 박덕남씨 부부는 "파국으로 가지 않고 빨리 직장에 들어가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고 싶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인터뷰 내용이 대화 중에 있었던 말의 앞뒤를 잘라 편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는 MBC가 노조원의 불안한 심리를 보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부가 먼저 불법행위?

이번 파업보도는 대한매일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이 한 목소리로 노조를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한겨레만이 사설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지지하는 종교인과 교수 , 국제 사면위 주장을 충실히 보도했다. 아울러 23일의 『지하철 파업보도 저울추 기우뚱』 기사는 타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24일자 『주한 외국인. 해외근무자가 본 '공공부문 파업'/생존권 외침'불편감수' 외국선 자율해결 기다려』 기사에서 공공부분 파업을 인정하는 다양한 외국의 사례를 보도하여 알권리를 충족시킨 좋은 기사라는 지적이다.

5월 1일자 <'불법파업' 몰아붙이기 언론이 일등공신> 역시 왜곡된 실상을 잘 파헤친 좋은 기사였다. '서울지하철 파업의 핵심은 '돈' 문제가 아니었

지하철파업 보도 저울추 기우뚱

노조 '불법성'만 일방적 부각
적자 불가피 구조적 문제 외면
단체협약 파기도 언급안해

다'며 "공기업의 단체협약과 기획예산위원회의 예산 지침이 서로 충돌한 데 문제의 본질이 있다"는 인하대 김대환 교수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 "단체 협약을 무시한 무리한 예산지침 강행은 명백히 '불법'에 해당한다. 하지만 모든 언론은 이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노조파업의 '불법성'만을 매도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체력 단련비, 인원감축 문제 등 노조의 주장이 왜곡 전달된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노조의 주장이 무시되거나 왜곡전달 되었다고 지적한 사례는 또 있다. 26일 네츠고 통신방에는 '명동성당에서 기자가 본 지하철 파업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다. 익명의 이 기자는 "먼저 대화를 기피하고 노조를 파업으로 몰고 간 것은 정부입니다"라며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늘리기 등 노동계의 합리적인 요구를 정부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공사, 지하철노조 간에 합의된 단체 교섭안을 깨게 한 것은 바로 기획예산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상에 명시된 단체 교섭안을 깨고 불법행위를 먼저 시작한 것은 바로 정부입니다"라는 획기적 주장을 펴 보였다. 뿐만 아니라 5월 2일 방영된 [정범구의 세상읽기]에 출연한 김기덕 변호사(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법률국장)는 '지하철 노조가 파업을 하는 이유를 시민들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는가?'라는 요지의 질문에 '언론보도 때문'이라고 서슴없이 답하기도 했다.

노조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시민의 불편과 경제를 볼모 삼아 파업 철회를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상황이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언론의 고정레퍼토리였다. 조선일보는 94년 지하철 파업당시에도 <불편 참아 버릇 고치자>(6월 26일자)라는 사설에서 "산업과 경제에 일대 타격을 가하고 동시에 국민일반의 생활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시민의 발을 자임해야 할 막중한 직업적 사명을 도외시하고 또 막대한 적자운영의 현실을 망각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권익확보만을 내세우는 행태를 시민들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27일자 한겨레신문의 그림세상은 이러한 점을 잘 꼬집고 있다. 호황일 때는 '모처럼 경제가 돌아가는데..'라며 노동자들의 파업을 비난하고, 경제가 어려울 때는 '경제가 무너졌는데 다 죽자는 거냐'며 매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게 바로 언론이라는 것.

한편 중앙일보 26일자 옴부즈맨 칼럼 역시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잘 지적한 기사로 평가받았다. 박명진 교수는 "쟁점사항인 경우엔 중립을 지키든지, 어느 한 쪽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든지 간에 관련 당사자의 입장, 의견의 공평한 전달이 전제 "되어야 하는 데 "노조 측 목소리가 실종"되었으며 "한쪽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황에서 가리는 시시비비는 왜곡이나 부당한 편들기가 될 위험성이 다분하고 설득력도 약하다"고 지적했다.

노조의 주장은 외면한 채 '파업의 명분이 약하다'거나 '불법파업' '시민불편' 등만 강조하거나, 공공부문의 파업도 인정하고 불편을 참는 프랑스나 영국, 이스라엘의 상황은 외면한 채 11400명이 해고된 미관제사 파업을 예로 들며 강경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편들기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 전년도 단체 협약사항이었는데 이행되지 않아 파업의 직접적 발단이 된 체력 단련비 지급문제에 대한 사 측의 협약불이행은 언급되지 조차 않은 점이나 노조가 증원을 요구했다가 철회한 점 등 변화한 내용의 보도에 인색한 것도 언론의 고의성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이번 파업과 관련, 많은 보도들이 언론중재위 도마에 올라왔다. 어느 때보다도 악의적인 왜곡으로 노동자들을 매도한 언론에 대해 중재위의 객관적인 심판이 기대되고 있다.

옴부즈맨 칼럼

한쪽 목소리는 잘 안들린다

박명진
서울대 교수
언론정보학

지하철 파업 등
큰 쟁점일수록
양쪽 주장 반영해야

한겨레 99/4/27

조폐공사 파업유도 문건 관련 보도

대한매일, 동아, 중앙, 한겨레, 한국

진상규명 실패, 언론도 주범

지난 12월 8일, 9일 이틀동안 언론은 '조폐공사 분규 해결방안 검토 보고서'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다. 대전지검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보고서는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에 검찰과 정부가 개입했음을 밝혀주는 주요 단서다. 하지만 언론보도는 이 문건이 노동계를 자극할 것을 우려해서인지 특별검사의 수사내용을 대변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또 축소, 추측보도가 주를 이루고 있어 독자들의 올바른 판단과 여론형성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밖에도 균형보도의 부재, 선정적 보도와 왜곡보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실 유·무에 관계없이 추측성 보도

추측성 보도사례는 대한매일에서 가장 많이 드러났다. 대한매일은 12월 7일자 1면 <강봉균 장관 서면 조사키로>라는 제목으로 "특검팀은 강희복 장관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 수사방향에 대한 추측기사를 내보냈다. 12월 8일자 25면 <조폐창 통폐합 조직적 개입 규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도 "최근 특검팀의 수사는 기획 예산처나 진형구 전부장의 지시 이전에 강희복 전사장이 조폐창 통폐합을 자체적으로 결심한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이 기사 역시 확실치 않은 수사내용을 추측하여 보도한 것이다.

또한 12월 9일 23면 <검찰 파업유도 없었다>에서는 "강 특검은 … 보고서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이미 검토를 끝냈다'며 수사를 더 이상 확대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는 내용으로 특검의 수사내용을 끝맺는 식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이틀전인 7일자 5면 기사 <파업유도 전모 뒤집힐 가능성>, 8일자 27면 <검찰 '파업유도'축소·은폐 의혹>이라는 기사에서 대한매일은 파업유도 문건에 대해 검찰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위의 보도사례와 정반대 되는 내용으로서 독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추측기사는 더 있다.

12월 8일자 21면 <강희복 전사장 불구속기소 방침>이라는 박스기사 역시 "특검은.....정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관측된다.", " 따라서.... 파업유도 공작을 기획, 실행에 옮겼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 적고 있다. 기획예산위 등 관계부처가 노사분규에 방관적 자세를 보인 것에 대해서도 "경제난국 극복이 당면과제였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를 법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인 것 같다"고 했다.

또 12월 13일자 21면 <강 전사장 '업무방해' 공소유지 주력>이라는 기사는 파업유도 특검팀의 남은 과제를 다루며 "처의 개입 여부를..... '강 전사장 이외에....'고 분명히 밝혀 정부와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러 문건이 공개된 만큼 공안 기능에 대한 강도높은 시정 의견을 보고서에 담을 예정이다.", "지방노동청..... 수사결과 발표 때까지 계속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라며 이 기사는 사실에 대한 보도보다는 추측성 보도로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추측보도는 한국일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2월 10일자 1면 <강희복씨 한밤 긴급체포>라는 기사는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진형구 … 강씨가 공모나 지시 관계에 의해 일으킨 2인극으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며 특검 수사결과에 대해 추측성 보도를 보였다.

12월 8일자 3면 <조폐공 입장 반영한 첫 '대책 보고서'>라는 큰 제목과 <'조폐공 파업해결' 대전지검 보고서내용>이라는 부제로 대전지검과 조폐공사 파업유도와의 연계가능성을 분석하여 보도하였다. 하지만 같은 면에서 강원일 특별검사와의 인터뷰 기사를 보면 <보고서가 파업유도 했다고는 보지 않는다>는 것을 제목으로 선정, 문건과 대전지검이 관련성이 없음을 강조한 편집을 보였다.

이상 살펴본 대로 특검의 수사보다 한 발 앞선 추측성 보도와 섣부른 수사 전망 등은 독자들로 하여금 올바른 판단을 하는 데 있어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 사실보도에 치중해야 하는 언론의 임무를 망각한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선정적 보도, 진상규명에 무관심한 태도 아닌가

지난 13일 민주노총 집행부 10여명은 강특검의 사무실을 찾아가 수사의 방향에 대한 서한을 전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나타난 의견충돌과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각 신문들은 사건의 배경을 설명하기보다는 현상 자체만을 매우 선정적 언어로 보도하였다.

동아일보 12월 14일 31면 <파업특검에 폭언 욕설 파문>이라는 기사는 「민노총간부 'xxx야, 이 정도면 나도 해', 법조계 '특검팀 공무집행 방해행위 해당'」 이라고 부제를 달았다. 또한 내용에 있어서도 "이들은.....'당신을 역사의 죄인으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소리쳤다.", "이들은.....'당신 xxx. 네가 특검이냐,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라고 선정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또 "법조계에서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특검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법조계의 입장을 덧붙여 노동자들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전달로 일관했다.

대한매일 14일자 23면 <민노총 간부, 강특검에 폭

언>이라는 기사 역시 "이XXX아, 당신이 특검이냐"라고 보도하였고 사진 역시 특검을 위협하는 노조간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같은 날 21면 <파업유도 특검팀 사면초가>라는 박스기사는 특검을 위협하는 노동계의 간부의 발언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그러자 배 부위원장은 '당신, 이XXX아, 당신이 특검이냐.....폭언을 퍼부었다..... 특검 수사관이..... ' 야, XX야 너는 뭔데 째려봐...."라고.

물론 욕설을 퍼부은 것은 그 누구도 긍정적으로 볼 수 없는 행위다. 그러나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가 과연 얼마나 은폐되었고 이것이 노동계를 얼마나 자극했는지 등 어느 언론도 민주노총 간부들이 왜 그렇게 욕설을 퍼부었는지 그 배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때를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욕설행위를 비판하고 나서는 언론보도에서 조폐공사 파업유도에 대한 문제의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비판이다.

문건에 대한 실체적 접근은 없고 축소보도하는 보도

12월 8일과 9일 대전지검 공안부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조폐공사 분규해결방안 검토 보고서에 대한 언론보도는 그 실체를 비교적 자세히 보도하려는 노력이 엿보였다. 하지만 점차 검찰의 발표에 의지하면서 탐사보도는 약화되어 갔다.

특히 대한매일은 12월 7일 1면 <강봉균장관 서면조사키로> 기사에서 "대전지검이 작성해 대검찰청에 정보보고 형식으로 보고한 이 문건에는 노조가 시한부 파업을 선언하자 곧바로 공사가 직장폐쇄를 단행한 9월 1일부터 18일 공안대책협의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사의 파업현황과 대응책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며 대전지검이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다. 같은 날 5면 <파업유도 전모 뒤집힐 가능성>이라는 기사는 「노조파업 맞서 조폐공 대응책 담아, 검찰 조직적 개입여부 밝힐 단서로, 통상업무-유도보고서 규명이 관건」라는 부제를 다는 등 검찰의 개입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 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러한 보도는 잠시, 점차 기사가 사회면으로 옮겨가고 기사 내용도 대단히 축소되는 경향을 띠기 시작하였다. 게다가 12월 10일자 23면에서는 <검찰 파업유도 없었다>라는 제목을 뽑음으로써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10일 이후에는 대체로 특검의 수사내용을 대변하는 정도로 그쳐 본질을 은폐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샀다.

12월 14일 <마무리되는 두 특검팀 수사>라는 사설에서는 "지금까지.... '파업유도'는 강희복 사장이 이를 주도했고 검찰이 이용당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특검 수사 결과에 얼마만큼 국민들의 믿고 납득하느냐가 두 사건의 의혹을 종결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본다", "우리는..... 수사팀 구성의 객관성과 그동안의 수사활동이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는 만큼 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는 두 특검팀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새천년과 함께 우리 사회의 소모적 논쟁도 끝내야 하겠다."라고 보도하며 더 이상의 정쟁을 회피하자는 분위기다. 그러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에 대해 전혀 문제제기하지 않은 것은 책임 회피라고 밖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한편 한겨레는 12월 11일 1면 <조폐공사 기획관리본부장 공안합수부 회의 참석/ 파업유도 조직적 개입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강원일 특별검사팀은..... 공안사범합동수사본부 회의에서 당시 송민호 공안부장가 정재봉 검사, 대전지방노동청 노사협력과장, 담당 근로감독관 등과 함께 파업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며 공안합수부의 파업유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 같은 날 3면 < 검찰-노동청-공사 '3각공조' 가능성>이라는 기사에서는 "대전지검 공안부가 지난해 11월 공안합수부 회의에 양승조 당시 기획관리본부장을 참석시켜 대책을 논

의한 사실은 '파업유도'에 검찰 공안부를 중심으로 한 공안합수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단서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4면에 실린 사설 <'파업문건'에 담긴 검찰 혐의>에서도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공사 파업사태를 검찰이 주도한 흔적이 담긴 대전지검 공안부 작성 문건이 나와 특검의 사법적 판단의 향배에 깊은 관심을 갖게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문건들이 대부분 지검장 명의였을 뿐만 아니라, 모두 대검에 보고되어 파업 직후 정확히 실행되었다는 느낌을 준다는 사실이다.", "강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범한 특검의 설립 취지나 권위를 무겁게 살펴 아무쪼록 공정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특검마저 실패하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여 특검의 명확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촉구하고 있어 특검의 수사내용을 보도하는 순에서 그친 타 언론과는 달리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이 보였다.

검찰-노동청-공사 '3각공조' 가능성

■ 공안합수부 회의 논란
참석한 공사본부장
통폐합 주도 인물
노동청-공안부 문건
대부분 내용 비슷해

검찰 "강희복 주연 진형구 조연"
공안부 조직적 개입여부엔 여전히 신중

'파업문건'에 담긴 검찰 협의

이처럼 한겨레를 제외한 각 언론들은 특검의 수사내용을 대변하는 것에 그쳐 독자들에게 문건의 정확한 실체와 의혹을 밝혀주는데 실패하였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언론에 깊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일부 신문의 편파보도 진상규명에 역행

조폐공사 파업유도문건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는 대표적 집단은 재계와 노동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신문들은 강씨의 구속에 있어 적법성, 그리고 재계의 반응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고 있는 반면 노동계의 입장에 대한 보도는 극히

미약하여 편파보도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신문은 중앙일보다.

중앙일보는 12월 11일자 4면 <주연 강희복 · 조연 진형구씨>라는 머리기사에서 "노동계도 '검찰 공안부와 노동청 등 다른 기관의 개입혐의가 뚜렷한 데도 특검이 묵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동계의 입장보도는 전체 기사에서 극히 일부분일 뿐만 아니라 같은 면 하단에서는 강원일 검사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모두 쳐다보는데 사건 축소 할 수 있겠나>라고 하여 노동계의 목소리를 약화시켰다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일보는 12월 13일 3면 <짜맞추기식 수사/ 노동계 '검찰 제3자개입 밝혀야'>라는 제목으로 "노동계는 강원일 특별검사팀이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무리한 구조조정 주도'로 결론짓고 수사를 종결하자 한결같이 반발하고 나섰다."라고 보도했다. 이는 타 신문이 노동계의 입장을 축소보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보도양상을 띤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 역시 12월 11일자 22면에서 <파업유도 수사 짜맞추기>라는 보도에서 "민주노총은 10일 강원일 특별검사.....사건수사가.....짜맞추기식으로.....노조가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하며 노동계의 입장을 기사화하고 있다.

이상 한국일보나 한겨레를 제외한 신문들은 대체로 특검의 수사 전개과정과 강희복 전사장의 구속에 따른 입장을 기사화 하는데 초점을 맞출 뿐 노동계의 입장을 보도하는 기사는 극히 미약하여 형평성에 있어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이 벌써 잊혀지는 분위기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의혹 투성이를 남겨둔 채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과 특별검사가 제대로 진상을 밝혀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리고 이 사건이 불거진 초기부터 축소, 은폐, 왜곡, 편파보도로 얼룩진 언론의 보도태도 역시 이러한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대북관련 보도 모니터Ⅳ-5

상업주의

안보언론

상업주의를 표방하는 것은 어쩌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기에 언론들은 선정성의 유혹을 쉽게 뿌리치지 못한다. 신문을 읽는 독자들도 이미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다. 그러나 대북 보도에 관련해서는 언론의 상업주의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북한이라는 곳에 대하여 국민들은 언론을 통한 일방적인 정보만을 얻을 뿐이다. 그러나 언론은 항상 국방부 발표를 인용하기에 급급했고 문제를 자극적이고 도발적인 것으로 포장하기에 바빴다. 그러한 보도의 대표적인 예가 다음 두 사건에서 나타난다. 서해교전, 북한 미사일 관련된 보도이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상업주의로 포장된 정보가 아닌 진짜 북한의 모습일 것이다.

상업주의 안보언론

- 서해안 사건관련 보도
- 북미사일관련 보도

'서해안 사건' 언론보도의 문제점

-사태 정확히 전달 못한 '졸속 보도'

'서해안 사태'에 관한 언론보도에는 우리 언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집약되어 나타나 있다. 남북간에 중대한 파급을 미칠 수 있는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언론은 '사실보도정신'에 기초하여 있었던 사실을 충실하게 전하려 하기 보다는 선정적 확대보도, 추측보도 및 예단보도, 경쟁적 떼거리즘, 냄비저널리즘의 구태를 재연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언론 자신이 먼저 '흥분'해 객관적으로 사실을 보려 하기보다는 각 언론사가 가지고 있던 기존 입장에 '서해안 사태'를 끼워 넣어 정국전반의 문제와 서해안 사태를 '재각본'하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될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경쟁적 떼거리즘, 냄비저널리즘 병폐 노출

서해안 북방경계선 상에서 남북 어업선과 경비정 사이에 문제가 생긴이후 6월 15일 이전까지 '서해안' 사태에 대한 보도는 한, 두 꼭지정도 신문지면 및 각 방송사 매인 뉴스시간에 보도되었다.

6월 15일 '서해안 사태'가 터지고 난 이후 신문과 방송(TV와 라디오)은 온통 서해안 사건에 관한 기사로 채워졌다. 각 신문의 6월 16일자 서해안 사건 보도 량은 아래와 같다.

(신문)

ㄱ. 조선일보 :1-2-3-4-5-6-7-29-30-31면에 관련기사, 8면 전육사교장 칼럼(총 32면, 전면광고 10면)

ㄴ. 한겨레 :1-2-3-4-5-6-14-15면

ㄷ. 동아일보 :1-2-3-4-5-6-7-22-23-경제면 1면

ㄹ. 한국일보: 1-2-3-4-5-6-7-8-9-11-15-22-23면

ㅁ. 중앙일보: 1-2-3-4-5-9-10-12-26-27-29-32면

(방송)

ㄱ. KBS 메인뉴스 : 6월 15일 5분만에 격퇴, 전군 비상령, 추가도발 대비 등 27꼭지(평균 40여 꼭지 중)

ㄴ. MBC 메인뉴스 : 6월 15일 '북 선제공격 격퇴' '긴박했던 순간들' '지키고 돌아왔다 '등 40여 꼭지(평균 55여 꼭지 중)

ㄷ. SBS 메인뉴스 : 6월 15일 '북 도발 저의' '사전 각본 있었나' '전군 전투태세' 등 24꼭지(평균 34,5꼭지 중)

이처럼 각 신문사와 방송은 '서해안 사건' 보도에 대부분의 시간과 지면을 할애했다. 물론 '사안의 중대함에 비추어 당연하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6월 15일 우리 사회에는 '서해안 사건' 이외에도 정국의 향방을 가늠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고, 좀 더 균형있는 양적 배분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객관성 실종, 불확실한 추측, 예단, 예측 보도

분단극복과 통일국가 건설은 우리 세대 앞에 놓인 현안이다. 그러므로 북한과 관련된 기사를 다룸에 있어 언론사는 더욱 정선된 보도태도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있었던 사실을 충실히 보도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사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서해안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 우리 언론은 언론의 정도를 지키지 않은 채 사건의 배후에 대한 불확실한 추측, 예단, 예측보도에 열을 올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의도적 기습이냐, 우발적 발포냐"(조선일보), '북한 왜 선제 공격했냐', '북 도발 사전에 계획된 듯'(한국일보), '서해교전 이렇게 본다' - 전문가 3인 진단(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듯 우리 언론은 우선 언론사 자신이 사건을 정확히 보고,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국민들에게 사태를 알리려하기 보다는 국방부나 합참본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신문사마다 약간의 보충취재를 통해 글을 만든 뒤 경쟁적으로 사건의 배경이나 추이를 진단하고 예측하려 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 누가 먼저 공격을 시도했느냐는 중대한 사안을 놓고 6월 15일에는 모든 신문과 방송이 " 우리측 해군이 먼저 충돌공격을 하자 북한이 사격했다"고 보도했다가 6월 16일 "북한이 먼저 충돌공격을 감행해 우리는 피하는 상황에서 총격전이 시작됐다"는 식으로 바뀌는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있었다. 또 교전시간도 6월 15일 당일 5분(교전 중에 누가 시간을 쟀는지 모르지만)이라고 모두 확정적으로 보도하더니 다음날 10분, 14분으로 변경 보도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선정적 '전쟁몰이식' 보도

우리 신문과 방송의 서해안 보도를 보면 서해안의 '전운'이 곧 한반도 전체를 휩쌀 것 같은 느낌이다. 실지로 서해안 사건이 터지고 난 직후 " 전쟁 났다며?", "서해에서 전쟁이 터졌데."하는 식의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의 언론이 서해안 사건을 보도함에 있어 1면 사진부터 시작하여, 제목, 기사 내용에 있어 " 마치 전쟁이 터진 듯" 쓴데서 온 부정적 여론 조성현상이다.

"서해교전, 북 어뢰정 격침" "포탄 우박, 5분만에 격퇴 끝" '북, 보복공격 우려, 군 준 전시태세로' "귀찢는 포성, 전쟁터지나"(중앙일보), " 북 어뢰정 1

척 격침...미군 증강키로" "소나기 함포, 5분만에 상황끝" '긴박했던 격전의 순간' '긴급. 긴급 준 전시상태 돌입'(동아일보), "북 함정 1척 격침, 5척 대파" "하늘 찢는 꽝꽝꽝 5분, 북 어뢰정 불기둥", "서해교전, 북 어뢰정 침몰" '서해 5도 전투 대비령, 준 전시상황 돌입' '76mm함포, 북 어뢰정 명중...화염치솟아' '북 어뢰정, 10여분만에 불기둥속 침몰'(조선일보), " 서해교전, 북 함정 1척 격침" "밀어내기 충돌 중, 북 기관포 꽝"(한겨레) '5분만에 격퇴, 전군 비상령' '계획된 도발?'(KBS)

대부분의 기사가 이러한 제목들과 함께 거대한 함포사진, 교전일지 및 그림 설명 등과 함께 "서해안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는 식으로 시작되고 있다. "전운이 감도는 서해연안에는 귀신 잡는 해병이 물샐틈없는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녘을 향한 총구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공군도 초 긴장상태에 돌입했습니다" "비무장지대를 사이에 두고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서부전전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속에...."(KBS 메인뉴스) "그 동안 적과 대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까맣게 잊고 살아온 것이 아닌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듯 장병들은 북측을 응시하며 경계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피해에 대한 보복으로 새로운 도발을 해올 가능성...."“북한이 충격전을 이끌어내기 위해 충돌 공격감행...."(이상 SBS)등은 현재 진행중인 전쟁을 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다. 실지로 서해안사건이 터졌을 때 관련기사를 쓴 기자들은 거의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음을 고려할 때 과연 우리 언론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 이래도 되는가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언론보도에는 그 동안 열흘 가까이 서해안에서 남북, 양측의 긴장상태가 조성되었고, 그 긴장상태가 '교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다리기라도 한 듯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북한 똑바로 알아야

북한의 연속적인 해상침범과 선제(先制) 무력사용은 최근의 국민의 대북인식과 대북정책을 보다 냉엄한 시각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우리 대북정책의 기조는 일종의 '이상주의적' 가설(假說)에 기초했다고 말할 수 있다. 한반도 불행의 근원은 냉전구조에 있고, 그 냉전구조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잘못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간의 대북정책 탓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방적인 '햇볕'을 꾸준히 펴나가기만 하면 북한도 결국은 개혁 개방쪽으로 나와줄 것이라는 기대가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현 정부의 그런 가설이 '대단히 취약한 희망사항'임을 일단 드러냈다. 이번 북한의 소행은 한마디로 김정일 정권이 남한 현 정부의 '햇볕' 구도(構圖)안으로 절대로 들어와주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천명해 보인 것이다. 김정일로서는 현 정부의 햇볕논리에 순순히 호응했다가는 50년 지탱해온 폐쇄적 독재체제의 이완(弛緩)을 자초하게 된다. 그러니 그런 위험천만한 '햇볕'에 그가 왜, 무슨 이유로 호응해주겠는가? 그러나 그러면서도 그로서는 '햇볕'이 가져다준 혜택— 즉 "상호주의도 따지지 않겠다, 식량도 주겠다, 비료도 주겠다, 관광객들의 현금 달러도 주겠다…" 하는 현 정부의 일방적 시혜만은 그것대로 따먹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남쪽의 정부는 현실적 필요상 계속 [illegible] 대상으로 처했지만, 남쪽 기업들의 돈과 남쪽인의 내부 친화분만은 [illegible] 선(善善惡惡)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북한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이유는 [illegible]. '햇볕'이 기대하는 긴장완화와 평화적 공존, 교류, 그리고 체제개방과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북한식 '혁명독재'와 북한식 '병영체제'라는 '북(北)'에 대해 '해체제' 구실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에 필요한 것은 [illegible] 남쪽과의 투철한 '혁명적-이념적 적대관계'이지 그 순정(純正)이나 이완이 아니다. 북한 권력자들은 이미 변하고 싶어도 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수도 있겠고, 북한으로서는 이왕 이렇게 된 바에야 [illegible] 이외에 없고, 그런 죽기살기 태세에 바탕해서 "우리는 전쟁도 불사한다"는 위협으로 오히려 햇볕쪽과 남쪽을 향해 "너희들이 변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부'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대북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겠다. 냉전구조 지속의 근본적 원인은 북한의 그런 본질적 속성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그동안 현 정부식의 '햇볕'을 쓰지 않았던데 있는 것이 아니다.

'사건'으로 '정책 기조' 퇴색시키기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하나의 정책기조이다. 그런데 6.25의 비극까지 겪은 남과 북 사이의 화해와 통일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므로 '햇볕정책'이라는 정책기조로 나감에 있어 수많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개방의 시대라고 해도 과거의 악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므로, 크고 작은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서해교전 사태도 그 걸림돌의 표현중 하나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언론은 " 서해교전이 터졌으니 햇볕정책이라는 큰 틀을 재고하자"는 단세포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점에 있어서는 조선일보가 가장 심하고, 동아일보, 중앙일보가 이에 편승하고 있다. 한국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 큰 틀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정책기조와 '사건'의 격이 다름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일보는 사건이 터진 뒤 사설(6월 16일)을 통해, "이번 북한의 소행은 한마디로 김정일 정권이 남쪽 현정권의 '햇볕' 안으로 절대로 들어와 주지 않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천명해 보인 것"이라며 " 국민의 정부는 대북 인식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라" 고 요구하고 있다. 또 6월 17일자 사설에서는 김대중대통령의 "(이 사태를) 냉전일변도로 몰아가서는 안되고 북한이 평화적으로 개혁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한반도 냉전이 격화되고 심화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문이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라는 식의 냉전적 논리를 내세우며 "국민의 정부의 균형된 역사인식이 아쉽다"고 꼬집고 있다. 동아일보도 6월 16일자 사설 <햇볕정책 이대로 좋은가>를 통해 "이(햇볕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답은 우리 관할 구역을 침범하고 먼저 우리를 향해 포를 쏘아대는 도발행위이다. 이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햇볕으로 북한을 감싸기만 할 것인가"라며 햇볕정책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다음날 또 사설 <남북교전으로 끝난 게 아니다>를 통해 "상황이 정리되고 정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대북 교류 스케줄을 조정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한겨레는 6월 16일자 사설 <햇볕정책 흔들림 없어야>를 통해 "햇볕정책이 장기적으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체해 ...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여는 현실적 방법"이라며 대북포용정책의 흔들림 없는 지속을 요구했다. 한국일보 역시 같은 날 사설 <포용기조는 지속돼야>를 통해 "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신 북풍론'이나 햇볕정책의 용도폐기론은 정치적 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북의 무력도발은 강력 응징하되, 대북포용정책은 지속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에 남북한을 화해와 대화의 당사자로 보기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로 보려는 기본시각이 여과없이 드러나기도 했고 '남한 올리기, 북한 깎아 내리기식 경쟁보도'의 구태도 답보되었다. 그러나 이번 서해안 사태보도에서 긍정적인 언론보도 변화현상도 있었다. 과거와는 달리 신문사간 차별성 있는 보도가 가능했고, 방송사들도 천편일률적이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모두 가지고 있었지만 시대의 변화가 언론계 일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발견할 수 있었다.

社 說

'冷戰일변도'論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5일 서해에서 남북간 교전이 있은 뒤 어느 모임에서 "확고한 안보태세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막겠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과거처럼 냉전일변도로 몰아가서는 안되고 북한이 평화적으로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견지해온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김 대통령의 이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김 대통령은 과거 남북관계가 풀리지 않은 것이 남한의 '냉전일변도로 몰아간 정책', 다시 말해 남한 역대정권들의 잘못된 대북기조(基調) 때문이며, 따라서 그와는 달리 현정권만이 '포용정책을 통한 평화공존론자'라는 식의 독단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초대 이승만(李承晩) 정부가 북의 6·25 남침 때문에 북진통일론을 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의 모든 대한민국 정부들이 오로지 냉전일변도 정책만 추구한 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부적확하다. 박정희 대통령은 초기엔 북한에 대한 우리의 힘의 열세를 인정하고 '선건설 후통일' 정책을 추진했으나, 나중에 국력에 대한 자신감을 기르면서 선의의 남북경쟁을 요구함과 동시에 73년에는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등 평화공존 내용을 담은 6·23선언을 발표했다. 그 후 '포용을 통한 남북평화공존'은 우리의 역대 대북정책의 일관된 기본골격이 되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이것이 교차승인론으로 발전했으며, 노태우 정부 때는 '동반자(同伴者)관계'로 격상되었다. 88년의 7·7선언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등은 한반도에서 무력대결보다 평화공존을 추구하려는 노력에서 나온 것들이다. 정책의 일관성에 있어 문제를 야기하긴 했지만 김영삼 정부 역시 마찬가지였다. 물론 이들 정부 때 남북대립과 대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런은 지금의 김대중 정부 하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역대정권 기조를 모두 냉전일변도로만 보는 것은 지난 30년간의 우리의 고심찬 평화공존 추구를 너무 불각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냉전이 격화되고 심화된 것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때문이란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1.21사태, 울진 삼척 공비사건, 858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만행 등 수많은 도발을 북한이 자행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대결로 치닫았지, 과거에 우리 쪽이 냉전일변도로 몰아갔기 때문이 아니었다. '국민의 정부'의 균형된 역사인식이 아쉽다.

사설

포용정책 흔들림 없어야

어제는 다행히 서해에서 별 충돌없이 넘겼다. 그러나 아직 남·북 어디서도 해결을 위한 뚜렷한 조처나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기에 언제 또 불행한 사태가 재발할지 몰라 긴장은 계속되고 있다. 남북 모두 자제력을 발휘하면서 대화로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충격적인 교전의 여파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시련을 겪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청와대 회담에서 햇볕정책을 포기하고 비료지원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수적인 언론들은 서해사태가 마치 정부의 포용정책 때문에 일어나기라도 한 것처럼 비판하며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서해의 포성으로 위기의식이 한껏 고조된 시점에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견지하겠다고 확인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처였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이회창 총재의 주장에 대해 포용정책이 반드시 성공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여러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음을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하고, 이 정책기조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한다.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명백히 함으로써 국민들 사이에 소모적 논란이나 비판적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서해 무력충돌이 준 충격이 워낙 컸기에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일부 보수세력의 목소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권 차원에서 볼 때 대북 포용정책은 국민들에게 그다지 인기있는 정책은 못된다고 봐야 할 것이다. 오래 참고, 많이 베풀어야 하지만 가시적 성과는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북한이 이번처럼 안보를 위협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나서니, 이 정책을 일관되게 견지한다는 것이 어리석은 짓으로 보이기까지 한다. 지난날 역대 정권이 포용정책을 아예 멀리하거나 비슷한 정책을 쓰다가 이내 포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포용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구조적으로 해체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꿈으로써 전쟁 가능성을 줄이고, 화해와 협력의 길을 여는 데 현실적으로 이 정책말고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강경론자들이 주장하듯 포용정책을 포기하고 응징 위주로 나아간다면 한반도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 뻔하다. 성숙한 국민의식도 정부의 결정을 이해하며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본다. 서해 사태에도 불구하고 의연히 금강산행에 오르고, 특별방송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생필품 사재기에 나서지 않는 국민들의 의연한 자세가 이를 말해준다. 포용정책이 눈에 보이는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 같지만, 남북관계를 쉼없는 파행으로 몰고가지는 않으리라는 믿음을 은연중 국민 의식에 심어놓지 않았나 생각한다.

냉전 논리 앞에 무너진 진실보도

통일지향적 태도 찾아보기 어려워 / 한겨레, 경향 신문만이 본질 접근 -

지금까지 우리 언론의 북한보도는 한반도의 위기 상황을 재차 강조하며 대북 강경노선으로 여론몰이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에 관한 보도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건의 본질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부족했고 이번 사안이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평화주의적, 통일지향적 시각에서 분석하기보다는 냉전적인 시각만을 그대로 답습했다.

각 신문들은 7월 30일자 1면에 한·미 국방장관 회담 내용을 일제히 보도하였다. 특히 동아일보는 <북 미사일 발사 강행 땐 군사적 대응 강력 추진>으로 제목을 뽑아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다른 신문들도 <북 미사일 군사적 대응>(중앙일보), <"북미사일 저지 군사대응">(한국일보), <북미사일 군사적 대응>(대한매일), <"북 미사일 강행땐 군사적 대응">(한겨레) 등으로 대부분 강경입장에 초점을 맞추어 제목을 달았다.

북한 미사일 관련 보도

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
한국, 경향, 대한매일
7월 28일~8월 6일

같은 날 합의의 내용과 의미를 분석한 3면의 해설기사는 대부분 강경대응을 합리화하는 내용이었다. <북미사일 대응 '시나리오' 마련>(동아), <"큰 채찍 있다" 북에 강력경고>(한국), <한·미, 북미사일 공중요격등 군사적 대응 시나리오 조율 "발사포가"압박>(대한매일), <미 막강화력 시위 북미사일 포기유도>(한겨레) 등의 제목이 이를 잘 말해준다.

특히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기사는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조선일보는 <미 '무력시위'로 북미사일 압박/"재발사땐 부정적 결과"강력 경고, 발사대

장착하면 즉각 군사조치>라는 제목으로 "양국 군 수뇌가 처음으로 군사적인 조치를 적극 검토키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며 '대북 미사일 군사조치 시나리오'를 표까지 동원하여 자세히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북미사일 압박 '도상훈련 끝'/발사 강행 땐 1주일 전 포착 가능, 미항모등 주일전력 4일내 파한(派韓)>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전쟁전야를 맞이하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게했다. 내용 역시 "외교·안보적 경고로는 약하다는 판단으로 군사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는 게 우리 군의 설명이다."라며 무력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각 신문들이 대문짝 만하게 보도한 이 내용은 바로 다음 날 '합의한 바 없다'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언론 역시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최근 방한한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과 한국측간에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 경우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방안을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언론보도는 앞서 국방부의 강경대응을 1면 머리기사로 다루었던 태도와 사뭇 달랐다. 1면 1단 기사정도로 다루거나 2면에서 취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주목받았다. 조선일보는 7월 31일 스트레이트, 해설기사를 전혀 다루지 않은 채 사설과 기자수첩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었다. 이날 사설 <이해못할 '과잉대응' 발언>에서 조선은 "(코언장관이) 대량 살상무기 비확산 원칙이라는 미국의 대외정책을 지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한 것이다. … 이번 양국 국방장관의 결정은 군사행동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에 그만큼 강한 메시지를 전하겠다는 의미가 아닐까? 그런데도 홍 장관이 '적전분열(敵前分裂)'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북이 우리를 얕잡아 볼지도 모른다"며 오히려 더욱 강경태세를 보였다. 대북강경입장이 남북관계를 얼마나 경색시키는지는 그 동안 수차례 경험한 바 있다. 이를 모를리 없는 조선일보가 군사적 대응을 '강한 메시지' 정도의 선언적 의미로만 해석, 그 부정적 여파를 얼버무린다면 너무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조선일보가 군사적 대응을 논의한 바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위의 사설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북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의 저지를 위해 다각적인 군사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단정했다는 것이다. 이를 전제로 위와 같은 강경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같은 날 바로 옆면(3면)에 실린 기자수첩에서도 "이런 이견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과 코언 장관간 회담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으며, 한-미-일간에 합의된 군사적 조치는 없다"고 비공식 확인했다"는 내용이 있다.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설에서 이를 뒤집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바로 같은 날 그것도 바로 옆 지면에서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는 태도다.

<한-미의 '히든카드'>라는 제목의 기자수첩에서 권대열 정치부기자는 "합의된 군사적 조치는 없다"는 것을 비공식 확인했다"고 기술한 뒤 이 또한 '군사적 대응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거나, '군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명쾌한 설명은 아니다"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전날 기사와 같은 날 사설에서 조선일보가 "조성태 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9일 국방부에서 가진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 미사일의 재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일본과 미국의 안보까지 위협한다고 평가하고 재발사 억제를 위해 다각적인 군사조치를 마련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는 사실이다. 위의 기사대로라면 최소한 '군사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러한 보도태도는 사실보도의 원칙은 물론 균형성에도 어긋난 것이다. 통일지향적 태도는 바랄 수 조차 없다.

강경대응 발언은 기사가치가 높고 그것이 잘못된 발언이라는 지적이나 대북 외교노력은 기사가치가 낮다고 판단한 것이기도 하다.

이들 신문과 달리 경향신문은 외교통상부 장관의 발언을 7월 31일 1면에 머리기사로 다루는 등 적극적인 보도태도를 보였다. <국방부 "북미사일 군사대응"-외교부 "미와 합의한 적 없다"/부처 혼선 … 누구 말이 맞나>라는 제목의 이 기사는 "베트남을 공식 방문중인 홍순영 외교통상장관은 … 미사일 발사억제책으로서 해상전략 강화 등과 같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3면에서는 '국방-외교부 왜 혼선 빚었나'라는 해설기사에서 "국가의 안위가 걸린 미묘하고 중대한 현안에 대해 어디까지 공표 할지조차 사전 조율한 바 없이 불쑥 발표한 국방부. 이에 불만이 있다고 남의 나라에서 자국의 국방부 발표를 정면으로 비난한 외교부. 국민들은 불안을 감출 수 없다"며 양비론적 시각을 보였다. 이밖에 한국일보와 한겨레, 중앙일보가 관련기사를 다루었다. 한국일보는 7월 31일자 1면에서 <북 미사일 군사대응 한미일간 협의 안해>라는 제목으로 1단 크기로 다루었다. 이어 4면 박스기사 <홍외교 북 미사일 군사대응 부정 배경/군사제재 비쳐질까 우려 외교적 노력 강조 '물타기'>를 통해 배경을 분석했다.

각 신문의 사설은 대북 강경노선을 더욱 분명히 했다. 한국일보는 7월 29일자 사설 <북 미사일 대응 분명히 하라>에서 "우리도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500km 미사일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식의 보다 적극적이고 분명한 배수진을 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대응을 노골적으로 부추긴 것이다. 일반 기사에서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인 동아일보는 사설에서도 이번 사안의 모든 원인과 책임을 북한에 두고 있는 시각을 보였다. 7월 30일 사설 <북한이 다시 오판한다면>에서 동아는 "이미 밝힌대로 당장 대북 경제협력이 끊기고 매년 해 오던 700억원 상당의 인도적 지원도 중단될 것이다. 더구나 우리는 공대지 미사일을 구입할 계획이고 사정거리 500km 미사일 개발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중이다. … 이뿐인가. 일본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조총련의 대북 송금을 중단시키고 … 무엇보다 일본은 북한 미사일을 빌미로 급속히 재무장해 가는 추세가 역력하다."고 장황하게 늘어놓았다.

이러한 입장은 조선일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일보는 7월 28일자 사설 <북 미사일 발사와 제네바 합의>에서 "북의 미사일 추가 발사는 일본이 국내여론을 내세워 경수로 비용을 부담할 수 없게 하는 등 한·미·일 3국간 공조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으며 나아가 일본의 군비확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라며 일본의 '군국주의화'의 일부 책임까지 떠넘겼다.

반면 한겨레는 30일자 사설 <한-미 국방장관의 대북경고>에서 "두 나라 국방장관의 발언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저지를 위한 뜻에서 비롯된 조치임을 이해한다. … 발사가 있더라도 곧바로 군사대응을 해서는 안된다. … 군사적 조치는 전쟁으로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밝혀 강경한 군사적 대응이 불러올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였다.

또 8월 4일자 한겨레 신문의 취재파일 <일본의 미사일 이중잣대>는 주목할 만하다. 이 기사에서 한승동 도쿄 특파원은 중국의 신형미사일 발사실험과 관련 "이번 실험은 특히 북한 미사일 재발사시의 초강경대응을 공언하면서 인접국의 미사일 개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 온 일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법했다. 난리가 나는 게 당연했다. 그런데 의외다. 일본정부는 제재나 비난은 커녕 한마디 변변한 논평조차 하지 않았고, 언론들은 발사사실과 배경만을 전하면서 엉뚱하게도 '미중관계 악화 우려'를 일제히 강조하고 나섰다"고 적고 있다. 이어 한 특파원은 "사정거리 8000km는 대포동 2호의 추정 사정거리보다 훨씬 더 길다. 북한이 일본영토 어느 지역을 표적으로 삼지 않는 바에야 미사일이 일본영토 상공을 통과했느냐의 여부만으로 일본의 이런 상반된 태도를 이해할 순 없다. … 이런 이중잣대로 북한을 설득해서 국제무대로 끌어낼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것이 북한을 미사일 개발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묻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경향신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경향은 8월 3일자 6면 <미사일 탄 '할리우드 액션'>[경향의 눈/강기석 논설위원]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한·미·일의 대북 강경입장을 '헐리우드 액션'에 비유하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것이 왜 우리의 안보에 위협을 주며 얼마만큼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증이 부족한 가운데 위기감만 까닭없이 증폭되고 있는 것 같다. … 그렇다면 대포동 미사일에 대한 미·일의 공포는 어느정도까지가 진실인가"라고 묻고 있다. 이어 강 논설위원은 "사정거리를 문제삼아 미사일 위기를 끊임없이 증폭시키는 일본은 혹시 무언가 딴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미국의 대언론들이 태평양지도를 펼쳐놓고 원을 그려가며 당장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것은 그 역시 무언가 딴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며 미일 양국의 본심이 강대국의 논리에 불과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칼럼은 "그들(북한) 나름의 국익에 기초한 현실적인 국가정책일 뿐이지 우리가 선과 악의 잣대로 재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지금은 우리가 북한과 미·일의 할리우드 액션을 적발하고 견제해야 할 때이지 덩달아 흥분할 때가 아니다"라며 신중한 대응을 당부했다.

이상 북한미사일 발사 관련 언론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미사일 모험'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책을 마련해야"(동아 6월 22일자 사설)하며 북한은 "벼랑끝 외교는 이제 끝내야 한다"(대한매일 7월 31일자 사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은 세계적인 왕따가 되는 것"(중앙일보 7월 28일자 사설)이라며 엄포를 놓기도 한다.

이번 사태는 지난 94년 체결된 제네바 합의를 미국이 잘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북한의 실력행사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북핵동결을 대가로 북-미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해제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대북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관계를 정상화한다는 이른바 '포괄협상'이라는 이름으로 북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왜 지금 북한이 이러한 미사일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은 어느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북은 이미 제네바 기본 합의문 파기까지를 전제로 행동하고 있다"면서 "미사일 문제에 대한 3국의 대응은 제네바 합의의 틀에 구속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틀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조선 28일자 사설)이라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8월을 맞아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정부는 통일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만 유독 냉전적 시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북 강경발언이라면 사실이 어떠하든 '환영'하고 이를 부추기기까지 하는 언론은 통일지향적 시각에서 볼 때 우리 사회의 '왕따'임이 분명하다.

92년 대선 선거보도감시를 하면서 의기투합. 다음해 5월 첫 보고서를 내면서 활동을 시작한 지 어언 8년이 흘렀다. 신문모니터부문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중앙일간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하는 단체는 아무데도 없다.)하는 단체가 되었지만 홀로가는 그 길은 참으로 수월치 않다.

지루하기 짝이 없는 신문보기와 십수명의 각기 다른 의견을 모아 정리해야하는 토론과정. '왜 내가 이 고생을 사서 하나"하며 자기 발등을 찍고 싶도록 힘든 보고서 작성과정. 여러 단계를 거쳐 보고서가 나와 각 언론사며 시민단체에 보내지만 반응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언론사의 무반응내지 무시는 그렇다 치고 심지어 같은 편이라고 믿고 있던 시민단체나 진보적 지식인들이 기고 거부운동을 벌였던 신문에 '공자님 말씀'을 늘어 놓고 있는 걸 발견하게되면 다 손 놓고싶은 생각이 열두번도 더 든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다 때려 쳐?'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화요일이면 어김없이 마포로 발길을 돌리게 된다.

신문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오래 못 살지' 하는 생각이 든다 (울화병 내지는 스트레스로) 그렇다면 신문에 의한 타살이라는 의학계에 남을 회귀병은 나하나로 끝내자. 다른 사람들은 신문을 보면서 정보와 함께 희망과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살신성인(?)의 생각이 마포행의 첫째가는 이유일 것이다.

그와 우위를 가리기 힘든 막상막하의 접전을 벌이는 두번째 이유. 8년만의 감격적인 졸업장을 받던 날, 옷자락을 붙잡는 선후배들을 뿌리치고 '짠' 나타나는 넘버 2. 창립(?)멤버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우리들의 반장님 정회종 시민언론운동본부장님. 넘들은 회사 다니는 것만으로도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저넉도 제대로 못 챙겨먹고 나오는 직장인 수용, 정환, 영민오빠. 민언련 대표 미모 간사로 승급해 활동하는 유경씨와 미모에서는 뒤질 수 없다며 맹 추격전을 벌이는 이지혜간사(박봉과 업무과중, 그리고 남자친구없는 3중고를 겪고있는 두 간사에게 괜찮은 친구를 만들어 줍시다) 역시 분과출신이며 분과원이다. 그 외에도 겉보기와 달라 사람 만나는 재미를 주는 경구, 영은. 들어온 지 1년도 안돼 넘버3에 오른 재롱둥이 기범. 진지함빼면 시체인 정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하는 선주, 조용함 속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수연, 바쁜 생활속에서도 분과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가장 깊을 것 같은 혜원. 갑자기 바빠져 얼굴 본지 오래됐지만 매너와 재치에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지존종호. 의장님으로 바쁜 와중에도 노력하는 창남, 그리고 비록 정기적으로 나오지는 못하지만 분과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여전한 김영일 선배님, 최환석씨. 김석곤과, , ,(신입들 명단 넣을 것) 화려함과 재미는 없지만, 오히려 썰렁하고 낯가림도 좀 심한 편이지만 끈기와 책임감 그리고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신문을 펼쳐든다.

언론인이 바라본 오늘의 신문

모니터 팀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약력

<동아일보>기자.
한국 언론 노동조합
연맹 정책 기획실장.
위원장 직무대행.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
대표 역임.
현<한겨레 신문>
여론매체 부장.

저서

<신문 읽기의 혁명>
<언론 개혁의 무기>

'언론인이 바라본 오늘의 신문'이 필자에게 주어진 제목이다. 1999년 한 햇동안 민언련의 언론운동가들이 이 땅의 신문과 방송을 모니터해 그 보고서를책으로 묶어 내는 마당에 끼어들기란 고백하거니와 민망스럽다. 그 어느 해보다 언론개혁의 요구가 거세게 일었으나 결국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더욱 그렇다. 물론 기자들도 부끄러움을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가령 1999년 10월29일 한국기자협회는 '오늘을 부끄러워하며, 언론계 모두의 환골탈태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참담하다. 기자라는 것이 이토록 부끄러운 적이 또 있을까싶다. 기자가 권력의 언론 길들이기 문건을 작성하고, 또 다른 기자가 그 문건을 정치인에 전달해 정치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성명서의 들머리는 오늘 언론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이른바 언론문건의 작성자와 전달자가 모두 기자였다는 단순한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오늘의 기자들에게 과연 기자정신이 있는가 라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제기되었다. 99년 가을중앙일보사 홍석현 회장의 검찰소환 장면이 텔레비전 저녁뉴스 시간에 전해질 때 이미 언론인들에 대한 눈길은 따가 왔다. 아무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신문사의 우두머리라 하지만 세금포탈 혐의로 출두하는 사람에게 기자들이 줄지어 서서 "힘내세요!"라고 외치며 박수를 치는 모습에 시청자들이 경악한 것은 당연했다. 도대체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물음도 잇따랐다. 문제의 심각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것이 비단 중앙일보 만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령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사주가 검찰에 소환된다고 가정할 경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저널리즘의 죽음이 회자되고 있는 까닭이, 언론운동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주목해야할 이유가 기실 여기에 있다.

'언론인이 바라본 오늘의 신문'

손석춘 (한겨레/여론매체부장)

현 단계에서 언론 운동의 당면 과제는 크게 두 가지로 간추려진다. 먼저 언론노동조합의 개혁이다. 6월대항쟁 공간에서 싹튼 언론노조운동은 90년대로 접어들면서 서서히 제도화의 길을 걸어왔다. 언론노동운동의 위기가 끝없이 제기되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심지어 언론노동조합 '해체론'까지 초기언론노조 간부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노조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발한 운동을 벌여 온 방송노조 또한 1999년여름 통합방송법을 놓고 벌인 파업과정에서 방송가 안팎으로부터 자사이기주의에 함몰되어있다는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언론노동조합이 제도권 노조로 편입되어있는 상황에서 그 노조를 근본적으로 재편성해내야 할 과제가 오늘의 언론인에게 주어져있는 것이다. 언론운동의 두 번째 과제는 언론수용자운동과 언론노동운동의 연대강화이다. 언론내부에서 언론노조를 개혁할 활동가들이 좀더 자유로운 활동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언론자본이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언론내부 구조를 개혁해야한다. 정기간행물법 개정운동이 그것이다. 현재의 언론구조 속에서 기업별 노조가 이를 전면적으로 요구하며 투쟁에 나서기엔 한계가 있다. 언론인들이 시민언론운동 단체들과 연대활동을 강화해나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한국의 보수적 정치구조 현실에 미루어 입법화를 위해 언론수용자들의 광범위한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는 동시에 시민언론운동의 질적 발전을 위해서도 절실한 과제이다.

오늘의 언론인들에게 희망이 없다고 진단하는 것은 언론인운동을포기하려는 변명일 뿐이다. 이를테면 '중앙일보 사태'가 전국을 뒤흔들던 1999년 10월 한국기자협회가 전국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라. '신문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을 묻는 설문에 기자들의 74.9%가 신문사주를 꼽았다. 이에 앞서 한국언론재단이 1999년 8월 미디어리서치와 공동으로 전국의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703명을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에서도 일선기자들의 98.3%가 '현재 신문사 소유구조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언론운동의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이다.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 바로 그것이 언론노동운동과 언론수용자운동 모두에게 주어진 공동의 과제가 아닐까.

언론모니터의 평가와 향후 활동

임 동 욱
(광주대 교수, 광주전남민언연 의장)

모니터는 언론이 행하는 보도, 해설, 논평, 사설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의 입장에서 언론을 감시하고 감독하여 언론이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민언연의 모니터 활동은 이미 십여 년이 넘도록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속되어 왔다. 그 동안 회원의 이탈, 아무런 보상도 없는 활동에 대한 회의감과 무력감, 모니터를 열심히 하여도 거들떠보지도 않는 언론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민언연의 모니터 분과는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민언연의 중심 기구, 아니 더 나아가서 시민언론 단체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모임으로 발전하였다. 그 동안 민언연 모니터 팀의 주요한 활동을 열거해 보자면, 거리 전시회를 가져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10대 오보 기사 선정, 조선일보의 극우 보수성을 널리 알린 자료집 '조선일보를 해부한다' 발간, 모니터 보고서 모음집인 '우리언론의 일그러진 초상화' 등 각종 모니터 보고서 발간, 그리고 선거 때만 빠지지 않고 행하는 선거보도 감시 행위, 다른 모니터 단체와의 연대 등 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 지난 2월 23일 발족하였던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에서도 민언연 모니터팀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약력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및 동대학원 신문방송학과 졸업
영국 레스터(Leicester)대학교 언론학 박사
중앙대학교, 인세대학교 강사
현재 광주대학교 광고정보학과 교수
현재 (사)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의장

저서

한국언론의 정치경제학(공저, 1990)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공저, 1993)
현대출판의 이해(공저, 1997)
정보사회와 매스컴(공저, 1998)

모니터 팀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활동상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아직도 모니터의 활동이 언론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아 가시적인 언론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사의 속성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렇게 쉽사리 언론개혁이 이루어지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니터의 결과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필자는 이러한 모니터의 활동이 더욱 힘을 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점들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언론사의 항의 방문, 피케팅. 기자에 대한 전화 항의 등 더욱 강한 행동이 필요하다. 언론사에 대한 직접적이고 강한 행동은 언론사가 모니터의 결과에 주목을 기울이게 한다.

둘째, 모니터를 할 때 기자의 이름을 밝혀서 기자로 하여금 자기가 쓴 기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기자 실명제를 실시하여 기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홈페이지 개설 등 일반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잘못된 기사나 잘된 기사를 인터넷에 올려 여론화를 하여야 한다.

넷째, 전술적으로 하나의 가장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언론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위해 한 신문에 대한 구독 거부 운동 등이 전개되어야 한다. 모든 언론을 대상으로 하면 그 동안 기울인 노력이 분산되어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한 신문사나 방송사만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 다른 언론사에게 경종을 울릴 수 있고, 이는 전체 언론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제 모니터도 단순한 모니터 활동에서 벗어나 행동이 수반되는 실천 전략을 구사하여야만 모니터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다. 모니터 팀의 분발을 더욱 촉구한다.

새로운 뉴스를 만드는 인터넷방송국 대안 http://www.daean.org

- ▶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적인 시민사회의 언론입니다.
- ▶ 보수 언론의 획일적, 일방적 시각에 대한 대안매체입니다.
- ▶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뉴스전문매체입니다.
- ▶ 왜곡된 매체 활동을 비판적으로 지켜보는 감시자입니다.
- ▶ 시민들의 능동적인 수용태도를 기르는 미디어 교육 공간입니다.
- ▶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인터넷 방송국입니다.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후원회원은 연회원 월회원으로 구분되며 후원회비는 각각 10만원, 1만원입니다. 후원회비를 내시는 분께는 매월 인터넷방송 [대안]에서 방송되는 작품중 몇 편을 골라 비디오 테잎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 후원회원이 되시면 인터넷방송[대안]에서 주최하는 영상제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강좌 수강료의 10%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 714-4562 혹은 E-mail : daean@daean.org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개혁, 시민의 힘으로!!"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www.ccdm.or.kr)을 소개합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언련)은

지난 1975년, "언론자유"를 외치다 해직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젊은 기자들, 80년 신군부에 의해 거리로 쫓겨난 '80년 해직언론인'들 그리고 진보적 출판인들이 지난 1984년 12월 19일 '민족·민주·민중언론실현'의 기치를 내걸고 창립한 언론운동전문단체입니다.

○ 창립 당시의 단체 명칭은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이었고, 지난 98년 3월 27일 사단법인으로 조직을 개편하기 전까지 그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 민언련은 대항 매체가 전무하던 시절,

『말』(현재의 '월간 말')을 통해 사회문제를 고발하면서 제도언론으로부터 외면 당한 민중의 진실을 알리는 데 주력했으며,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자랑스런 국민주신문 『한겨레신문』 창간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대항 매체 창간에

주력해 온 민언련은 지난 1990년 『언론』으로 대항하는 운동, 언론인만 참여하는 언론운동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시민언론운동시대'를 선포하였습니다. 언론운동은 『언론』의 진정한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 이러한 '시민참여 언론운동'의 방향에 따라

지난 91년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언론교육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나라 시민언론교육을 대표하는 강좌라고 할 수 있는 <언론학교(현재 33기 모집중, 연 4회 개최)>와 <대학언론강좌(매년 방학기간에 개최)>가 바로 그것입니다.

○ 이러한 교육사업의 성과는

민언련을 살찌우는 든든한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해부터 <언론학교>를 졸업한 시민들이 '동우회'를 조직하기 시작했고, 회원 참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도에는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라는 조직 결성을 주도하여, 우리 나라 언론모니터운동의 단초를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민언련에는 신문모니터, 방송모니터분과가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신문방송모니터활동을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98년에는

시민저널리즘의 새로운 영역을 넓히기 위해 <비디오 저널리스트(VJ)과정>, <오연호의 기자만들기>,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언론인실무학교(한겨레문화센터와 공동진행)> 등을 개설, 적극적인 시민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러한 다양한 시민교육의 성과에 바탕하여 회원모임과 회원활동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모임은 신문·방송모니터 분과 외에 영화분과·노래분과·참언론산악회·인터넷분과·사진분과·VJ분과·언론아카데미 동우회 등이며, 민언련은 이러한 시민들의 참여와 활동에 바탕한 회원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한편, 언론운동전문지인 「민주언론운동」을

격월간으로 발행, 언론유관단체(또는 개인) 등에 발송, 시민언론운동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으며, 매월 회원 소식지인 '회원통신'을 발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 현재 회원은

450명, <언론아카데미> 동우회원은 5,000여명입니다.

○ 한편, 광주전남과 전북, 경남과 부산에는

각각 광주민언련, 전북민언련, 경남민언련,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의 민언련 연대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전지역에서 민언련 준비모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이러한 지역 연대조직과의 긴밀한 연대활동과 연대사업을 통해 언론개혁을 전국 동시적으로 이뤄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청자연대회의, 언론개혁시민연대,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방송법쟁취국민운동본부 에도 주요단체로 참여하여 언론개혁과 시청자주권 확보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신문 연대조직인 '바른지역언론연대'와 밀접한 연대를 맺고 있으며, 전대기련 등 대학언론 조직과도 지속적인 연대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 민언련은

우리 사회에서 신문과 방송 등의 언론매체들이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본연의 공적 역할을 올바로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비판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를 위해 제도화가 필요한 부분은 법·제도개선운동을 통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운동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시대"를 맞아 시민들이 여러 언론매체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 나가고 그를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진정한 언론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 민언련은

지난 84년부터 한결같이 언론민주화와 언론개혁을 위해 일해왔고 또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들을 위해 일해나갈 것입니다. 시민단체의 성장은 곧 시민사회의 성숙을 의미합니다. 더욱 적극적인 언론감시활동을 위해, 더욱 다양한 시민언론교육을 위해, 그리고 더욱 활발한 대안언론운동을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 ▶ 민언련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 ▶ 민언련 언론개혁실천단에 참여하십시오.
- ▶ 민언련 신문모니터 활동의 주역이 되어 주십시오.
- ▶ 민언련 방송모니터 활동의 주인공이 되어 주십시오.

노래분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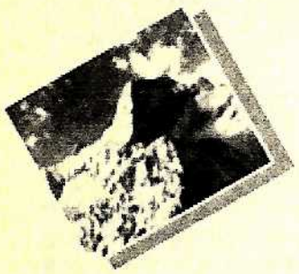
언제나b 가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아마추어 노래동아리입니다.
우리는 민중가요 뿐 아니라 곡 좋고 가사만 좋다면 대중가요, 팝송, 랩 등 가리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총4회의 공연을 성황리에 이끌었습니다. 노래분과의 공연은 민언련 회원들과 시민들에게 '언론개혁'에 대한 염원을 되새김하는 좋은 자리로 발전돼 왔습니다.

노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는 분이라면 언제든 환영합니다.

참언론산악



산이 좋아 사람이 좋아 민언련 가족과 함께 한지도 수년이 흘렀다.
산을 애인같이 좋아하는 인연으로 지리산 하산길에 만난 민언련 회원과의 만남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었고, 그 만남은 지금껏 변함없이 이어오고 있다. 변한 것이 있다면 흐르는 시간과 함께 그 때 만난 두 여인 중 한 명은 보금자리를 찾아 떠났고, 또 다른 한명은 무엇이 그리도 바쁜지 얼굴을 보기가 여간 쉽지를 않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라 여겨지지만 매번 산을 오를 때면 한번쯤 나올 때도 되었는데 하고선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주위를 살피는 버릇이 생겼다.
우리 민언련에는 많은 분과모임이 있고 민언련의 상징적 활동인 신문분과, 방송분과, 영화분과 등 모니터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며 대언론 바로잡기 운동을 담당하는 분과와 함께 최근에는 디지털시대에 대응키 위한 인터넷방송국이 개국되어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직접 언론활동과 관련되는 분과도 있지만, 민언련의 한 분과로써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민언련의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버팀목을 다하고 있는 참언론산악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참언론산악회는 다른 분과 모임과는 달리 소속감이나 응집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회원은 어느 분과보다도 많이 가입되어 있건만 정작 산행에 참여하는 회원은 그리 많지 않다.

모두가 너무 바빠서, 휴일은 집에서 좀 쉬고 싶어서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피로는 꼬-옥 잠과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강조하고 싶다.

일주일간의 도심속 찌든 공해와 각종 스트레스에 찌든 몸과 마음을 휴일은 꼬-옥 참언론 산악회와 함께 한다는 스케줄을 스스로 편성하여 습관화를 시켜보자. 민언련회원 여러분 !

나는 우리 민언련 회원은 전 회원이 당연직 참언론산악회 회원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시민운동을 위해선 시민과 함께 어울려 호흡하여야 되는데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홍보활동이 없지를 않은가?

민언련 전회원이 한달에 한번 산행에 참가한다면 자연스럽게 민언련의 역할과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고, 대외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그냥 막연하게 다른 일 다 보고 나서 이번주는 산에나 한번 가 볼까 하고 집을 나섰다면 이제부터는 매월 4째주 일요일은 야외에서 민언련 회원들과 어울려 심신을 수련하는 날로 만들어 보자.

각 분과별로 색깔이 있기 때문에 때론 잠을 세워가며 토론도 하고 때때로 모임도 같지만 휴일 만큼은 참언론산악회와 같이 어울려 우리 민언련의 응집된 힘을 과시해 보자.

한주일 동안 지쳐 있는 심신을 낮잠을 때우려 하지 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에 올라 야호를 힘차게 한번 외쳐보자.

참언론산악회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또한 비분과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새천년 산행은 서울 근교 산행으로 쫙 깔았습니다.

늘 부담없이 같이 올랐으면 해서요. 지리산이나 설악산은 안 가느냐구요?

봄가을 이벤트 산행으로 황금 연휴를 택하여 반드시 진행할 계획입니다. 같이 참여를 위해서는 휴일산행에 꾸준히 참여하는 습관을 길러야 힘이 덜 들겠지요. 집에서 잠으로 휴일을 보내는 일보다 훨씬 뜻있고 보람된 하루가 될 테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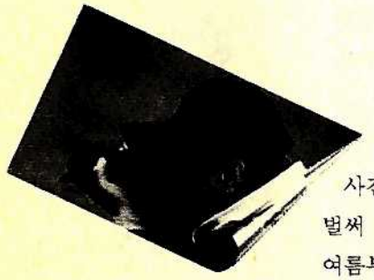
금년 한해만 참언론산악회와 함께 해 보세요.

그럼 저절로 다음과 같이 될 터이니

나는 아무래도 다시 산으로 가야겠다.
혹은 맑게 혹은 거칠게 내가 싫다고는 말 못할 그런 목소리로 저 바람소리가
나를 부른다. 흰 구름 떠도는 바람부는 날이면 된다.
그리고 눈보라속에 오히려 따스한 천막 한동과 발에 맞는 아이젠 담배 한
가치만 있으면 내겐 그만이다.

나는 아무래도 산으로 가야겠다.
떠돌이의 신세로 칼날 같은 바람이 부는 곳
돌새가 가는 길 표범이 가는 길을 나도 가야겠다.
껄껄대는 산 사나이들의 신나는 얘기와 그리고
기나긴 벼랑길이 다하고 난 뒤의 길은 잠과
달콤한 꿈만 있으면 내겐 그만이다

사진분과



작은것이 아름답기도 하지만 맵기도 하다

사진분과는 지난해 9월 9일 탄생했습니다. 아직 걸음마도 제대로 못하는 데 벌써 분과소개라니 좀 더듬는 말이 나올밖에요. 이해해 주시길... 그러나 98년 여름부터 시작한 민언련 다큐 사진강좌가 벌써 4기를 마친 상태였고 1기부터 4기까지 수강했던 인원도 100여명에 달했으므로 그리 간단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4기 강좌를 마치고, 작지만 이제는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마침내 사진분과를 결성합니다. 지금은 6기회원까지 강좌를 마치고 분과활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분과장은 4기강좌를 수강했던 김득연님. 총무는 같은 4기 이수현님.

사진분과는 모토랄까 지향하는 몇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한가지만 소개합니다. 사진분과사람들의 사진찍기는 사진의 안과 밖이 서로 엎치락 뒷치락거리는 속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사진이 보여주는 세상과 그 세상에서 행세깨나 하거나 혹은 소외되는 사람들의 이야기을 소중하게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그 안과 밖이라는 것은 다시말하면 서사(敍事)를 사진으로 기록하고 혹은 사진속에서 서사를 풀어내는 작업이겠지요. 언제부터 우리는 우리삶에서 이야기를 잃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야기를 찾자는 것입니다. 사진이라는 것이 기실, 수많은 연속하는 움직임에서 단 한 장면에 집중하지만 그것은 그 단 한 컷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분과원들의 사진에 대한 갖은 고민들이 사진분과 홈페이지 게시판을 수놓고 있습니다. 찾아와주세요.

사진분과는 매주 목요일 밤에 분과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달에 한두번은 함께 모여 사진을 찍습니다. 목요일모임은 회원들이 그주간 찍은 사진을 함께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기술적인 숙련도가 높지 않아서만은 아님) 그 사진이 담고 있는 속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말하자면 품평회시간인데 혹독함은 거의없고 칭찬일색이라 백화제방(百花齊放), 웃음꽃만 만발하답니다. 사진품평이 끝나면 아직까지는 분과의 정체찾기, 향후 사업일정에 대한 고민들이 우후죽순 터져나옵니다. 비가 내린 날이면 더하다지요. 그런 이야기과정을 통해 출사일정이며 민언련 하부조직으로서의 연계활동이며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진분과가 지나온 발자취를 보건대 모든 의결사항은 모임 끝난 뒷풀이자리에서 정해집니다. '오고가는 술잔속에 싹트는 분과사업.' 1박2일간 치르는 뒷풀이는 어느덧 사진분과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엮는 고리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비록 몸은 피폐하고 황폐했지만... 마음만은 서로에게서 나는 향기를 아는 사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빗물같은 비린 술향기지만...

그동안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 출사일정 몇, 소개합니다.

우선 철원기행. 지난해 12월 21일. 사진분과가 1기에서 6기까지 (6기는 강좌가 진행중이었음) 통틀어 분과원이 모두 참석해 찾아간 우리역사의 변방, 철원. 분과원 30여명이 참석하고 분단과 철원을 중심으로 사진작업을 하는 이시우작가와 함께 한 하루 일정이었습니다. 궁예 태봉국의 발자취에서부터 천년의 역사동안 철저히 따돌림받은 철원사람들의 흔적과, 민통선안 월정리역과 웅장했던 노동당사가 상징하는 분단의 상흔까지, 두루 보듬는 겨울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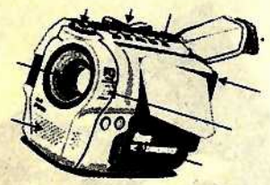
그리고 강화기행. 분과 출사역사상 처음으로 아홉달 이십삼일 짜리 아이가 참석한 강화사진기행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올 2월 19일에서 20일까지 강화도 일대에서 벌인 사진분과 늦겨울출사.10여명의 회원과 예비회원(9달23일 배속아기)이 함께 했습니다. 첫밤을 섬 북단 민통선안 조직원 신모양의 비트(비밀아지트)에서 보낸 일행은, 사진분과의 사업계획에 앞서 현정세분석에 늦은줄도 몰랐고 지척같은 거리에서 쏟아드는 선전선동의 거친 목소리속에서

사뭇 남북한 대치 상황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강화출사는 분단과 강화풍물, 강화 토종의 맛, 보름달의 운치, 바다와 개펄이 가슴에 아무말 없이 밀려들었던, 하룻밤 이틀낮이었습니다. (사진분과 홈페이지 참고하세요. 리얼한 사진들이 올라가 있답니다.)

앞으로 사진분과는 지속적인 출사와 함께 자체 사진강좌를 마련합니다. 그 강좌는 사진이론부터 사진 고급기술까지 포괄한답니다. 그리고 웹진 <스밈>을 꾸며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진분과사람들의 속내와 민언련의 이야기를 재밌게 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매체 사진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언론운동의 한 전형을 획득하기(?)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민언련 회원동지 여러분!
귀염둥이 사진분과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바랍니다

비디오저널리스트 분과



1. 활동내용
- 모임의 취지는 '대안매체 제작운동'으로 한다. 주류매체의 내용과 활동을 비판하고 다양한 계층과 계급의 소외된 이야기와 생활속에 은폐된 모순을 폭로함으로써 대안을 제시하고 기반조성에 노력한다.

- '제작'이 중심이 된 활동을 한다.

기획 : 시민뉴스와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주제와 형식으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매월 기획회의를 개최한다

모니터 : 국내외 우수작품을 모니터하고 감독을 초빙하여 대화의 시간을 가진다.

교육 : 영상제작과 관련된 자체워크샵과 외부강사 초빙교육을 병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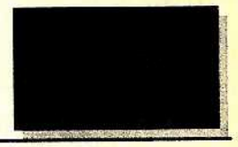
시사회 : 기획회의를 거쳐 분과내에서 제작된 작품을 분과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품평하는 자리를 가진다.

- 대안매체 제작운동의 기반마련
액세스 채널 확보

양심의 자유, 표현과 언론의 자유 확보
타 독립제작단체 및 시민영상단체와의 연대활동

2. 집행부 구성
- 분과장 , 총무 , 교육부장 , 조직부장
- 제작아이템별로 집행부와는 별도의 제작팀 구성

3. 정기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영화분과

영화분과의 유래와 현황

영화분과 '영상세대'는 1993년 6월 25일 당시 초창기 민언협 언론학교 졸업생들을 중심으로 영화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영화비디오반'이라는 명칭으로 시작하였다. 이후 영화반이란 이름으로 매주 한번씩 금요일마다 정기 모임을 가지며 영화에 대한 인식을 넓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그 이후로 영화사조, 작가영화, 제3세계 영화, 일본영화, 호러영화 등으로 구분지어 영화를 감상하였고, 단편영화 감독과의 대화, 영화평론가 초청강연 등을 통하여 영화의 현장을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하였다. 1996년 이름을 영화반 '까메오'로 바꾸고 계속적인 영화상영과 비평, 영화반 소식지 발간 등을 통해 꾸준히 활동하였다. 이후 활동의 정체기를 맞을 즈음, 영화반을 쇄신하고자 회원들의 총의를 모아 1998년 2월 영화분과 '영상세대'로 명칭을 바꾸고, 계속적인 영화 상영과 비평을 함은 물론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영화제작을 기획,진행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 결과로 1999년 민언련 영화분과 <영상세대>의 이름으로 단편영화 <엄마의 식사준비>가 만들어졌다. 올해는 보다 부단한 노력으로 영화감상과 비평의 수준을 한차원 더 끌어올리고, 영화제작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의 영화분과 계획

올해는 영화감상의 방법을 실험적이지만 전문적인 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영화에 대한 인상비평이나 내러티브에 대한 이해에 머무르던, 매주 1회 영화 보고 바로 각자의 견해를 밝히는 초급적인 단계에서, 해당 영화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영화영어를 이해하기 위해서 첫주에 영화보고, 다음 주에 분석을 하는 '2주 영화 감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 속에서 현재 영화분과의 취약점인 영화적 시각언어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우리 나름의 분석틀을 다지려고 한다. 현재 알프레드 히치콕의 <현기증>을 감상, 비평하였고, 앞으로 오즈 야스지로의 <동경 이야기>와 오손 웰즈의 <시민 케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준비 과정이 끝나면 당장 우리에게 관심이 가고,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영화들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할 예정이다. 기대해도 좋을듯...

이것과 병행하여 올해에도 꾸준히 단편 영화 만들기를 기획하고 진행하고자 한다. 이미 만들어진 영화를 감상, 분석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어설프더라도 직접 자신의 시각과 언어로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적극적 자세로 '영화'라는 장르에 접근해 가려는 <영상세대>의 노력이 올해에는 보다 역동적이고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력이 많이 드는 일이라 그만큼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주변 사람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가 발간하는 월간 "열사회보"와 조흥은행노동조합에서 발간하는 격월간 "조흥노보"에 민언련 <영상세대> 이름으로 실리는 글들을 올해도 꾸준하게 써나갈 것이다. 이들 두 잡지에 이전에 실렸던 글들을 보실 분들은 민언련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영화분과를 클릭하면 볼 수 있으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방문하시는 길에 좋은 글들 많이 남겨주세요.

덧붙이는 말

영화분과 <영상세대>는 건전한 시민사회, 올바른 언론개혁을 열망하며 행동으로 옮기고자 합니다.

영화분과 <영상세대>는 민언련 회원활동의 모범이 되고자 합니다. (특히 뒷풀이 문화에...)

영화분과 <영상세대>는 민언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데 물심양면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냐구요? 만든 작품이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타면 확실하겠죠.

마지막으로, 영화분과 <영상세대>는 민언련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모인 분과랍니다. 진짜루~

민언련 언론아카데미를 소개합니다

【 언론학교 】

"참언론 실천 한마당" 언론학교는 지난91년 11월에 신설되어 현재 33기 수강생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교육에 대한 요구가 드높았던 개설 당시 100여명 이상의 학생·시민이 모여 언론에 대한 관심을 모았던 민언련의 대표적인 강좌입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현재 언론에 대한 자각과 민주언론에 대한 꿈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 **강사 및 강의내용**

1. 뒤집어 보는 언론의 역사 - 이효성(성균관대 신방과 교수)/ 2. 신문읽기의 혁명 - 손석춘(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 3. 왜곡사례로 본 방송과 현명한 시청자되기 - 최문순(언론노련 위원장)/ 4. 미디어 세상을 향한 새로운 도전들 -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5. 풀뿌리 언론이 세상을 바꾼다 -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수련회> 시민언론운동 바로알기

6. 시민운동가의 제언 : 언론개혁, 이렇게 하자/ 7. 북한관련 보도의 숨겨진 진실 - 정일용(연합뉴스 북한부) /8. 언론노동운동의 과제와 전망 - 손석희(MBC 앵커)/ 9. 언론에 빼앗긴 인권 되찾기 - 박형상(변호사)/ 10. 시민이 할 수 있는 언론운동 - 최민희 (민언련 기획관리국장)

▶기간 : 주2회 매주 화·목 7-9시(연4회), 총10~12강

▶수강료 : 50,000원

【 신문·방송 모니터 학교 】

사회를 투영하는 창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문과 방송. 매스컴을 받아들이는 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비판적으로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고 버릴 것을 알고 접근하는 자세를 길러주는 강좌입니다.

● **강사**

최민희(민언련 기획관리국장), 최영묵(방송진흥원 선임연구원), 박웅진(방송진흥원 선임연구원), 김종배(미디어오늘 편집국 부장), 김은주(민언련 신문모니터분과장), 정희종(민언련 시민언론운동본부장)

● **강의내용**

매체비평, 왜 하는가/영상언어의이해/방송프로그램비평(드라마, 시사·보도, 쇼·오락)/신문편집의 숨은그림/신문의 왜곡보도/매체비평실습

▶기간 : 주2회 매주 화·목 7-9시, 총10강
▶수강료 : 50,000원

【 대학언론강좌 】

대학언론사 일꾼 및 기사쓰기에 관심있는 이를 대상으로 전현직 기자들의 현장감있는 강의가 일품입니다. 신문의 제작구조와 편집론, 기사작성(스트레이트와 인터뷰) 실습은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 **강사**

손석춘(한겨레여론매체부장), 정지환(월간「말」기자),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최민희(전 월간「말」기자, 민언련 기획관리국장), 김효끈(교사, 전「우리교육」기자), 임종업(한겨레신문 편집부 차장)

● **강의내용**

시민언론운동론/신문제작구조의 이해/기획과 현장취재/기사작성실습1(스트레이트)/기사작성실습2(인터뷰)/우리말글 바로쓰기/신문편집론

▶기간 : 여름·겨울 방학기간 중 1주 4시간(1-5시) 총10강좌
▶수강료 : 70,000원(대학언론사 단체할인 50,000원)

【 비디오저널리스트(VJ)강좌 】

다가올 퍼블릭액세스 시대를 대비하고자 시민 제작자 양성을 위해 구성된 강좌. One-man System, 즉 기획에서 편집까지 '나홀로'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켜주는 강좌.

● **강사**

송덕호(VJ), 안해룡(아시아프레스인터네셔널 서울사무소 대표, VJ), 박수택(SBS보도국 기자), 이창재(Q채널 아시아리포트팀장), 임상택(민언련 사무총장), 김명준(노동자뉴스제작단 대표), 김동원(다큐감독), 윤영진(VJ), 변영주(다큐감독)

● **강의내용**

VJ란 무엇인가?/VJ와 시민언론운동/진보적영상운동/VJ와법/다큐멘터리의 구성
【실습】 뉴스만들기(기사구성요건·취재와 인터뷰/과제물시사·토론·평가) 미니다큐만들기(기획/구성) 촬영(카메라기초·원리와 특성/영상언어의 이해/카메라와 대상과의 관계/사운드와 조명/현장촬영·인터뷰) 편집(뉴스편집·편집실습/후반작업개괄·편집이론/자막기·효과기·믹서/컴퓨터 편집의 실제/믹싱) 야외촬영(현장취재)

▶기간 : 3개월 매주 월·수 7-9시, 총21강좌
▶수강료 : 400,000원

【 인터넷 저널리즘강좌(사이버 저널리즘) 】

일반적 언론행위(old media)에서부터 사이버저널리즘(new media)에 대한 이해를 도모함. 전자신문제작 방법론을 제시하고 '올바른 언론인 마인드 형성'을 통해 '사이버 언론인'으로의 입문을 돕도록 구성되어 있다.

● **강사**

문병원(하인학술정보 대표), 김미경(인터넷한겨레 뉴스팀장),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 **특강**

김재범(한양대 신방과), 김서중(성공회대 신방과), 박형상(변호사), 웹진운영자(미정)

● **강의내용**

미디어의 이해/인터넷신문이란?/컨텐츠 기획, 인터넷 취재/WWW·웹/PC통신·Telnet/E-mail·전자우편·메일링리스트, 유즈넷·뉴스그룹/무엇이 기사인가?(old media의 이

해)/웹진운영자 초청강연/통신과 언론법제/인터넷과 시민언론운동
【사이트제작실습】 서버설치를 위한 사전 준비사항, 서버·도메인 설치 및 호스팅/기획-좋은 사이트 분석(벤치마킹)/이미지가공-컨텐츠등록/HTML편집 및 디자인

▶기간 : 2개월 매주 화·목 저녁7~9시 20강좌
▶수강료 : 200,000원

【 다큐멘터리 사진강좌 】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진기자들의 현장감있는 강의가 일품입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에 대한 기초적인 접근부터 매 강좌 실시하는 실습은 사진에 관심있는 시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 **강사**

김영식(사진실험공간PARA실장), 박진희(사진실험공간PARA사진가), 이정용(한겨레21사진기자)

● **강의내용**

근대적 시선(투시법) / 동일시의 시선 / 초점, 노출 / 사진적 요소와 원리(심도, 동감) / 응시의 시선 / 시점, 프레이밍 / 르네상스적 시선과 바로크적 시선 / 조형적 요소와 원리 / 광선의 유형과 방향 / 인공광의 특성과 활용 / 이미지와 텍스트 / 구성방식(포토스토리, 시리즈, 시퀀스) / 몽타쥬, 다중시점, 유형학, 포토-텍스트

▶기간 : 2개월 매주 수·토 주2회 진행 16강좌
▶수강료 : 200,000원

【 기자만들기 】

기자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글쓰기 및 기자체험강좌. 기자론으로 시작한 강의는 기사작성법, 취재론, 기자윤리, 기획, 사회진출 및 매체창간까지 관심있는 분야의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강좌입니다.

● 담임강사 :

오연호(웹신문 OhmyNews창간준비위원장, 월간 말 심층취재 전문기자)

● **강의내용**

기자론 / 기사론(기획론, 문장론) / 현장취재(일반론, 형상화론, 메시지론) / 인터뷰(일반론, 특수상황) / 심층취재 / 인터넷뉴스 / 매체사진론 / 취재원관리법 / 마감지키기 / 기자윤리 / 사회진출과 매체창간론

▶기간 : 2개월 매주 금 주1회
▶수강료 : 200,000원

【 기자학교 】

한겨레문화센터와 공동으로 기획, 진행하는 강좌. 언론종사자 및 실무자 워크샵으로 기획된 본 강좌는 기사작성에 대한 실습과 함께 두 차례에 걸친 신문제작을 경험할 수 있다.

● 강사

임재경(민언련 언론아카데미 교장, 전 한겨레신문 부사장) / 손석춘(한겨레신문 여론매체부장) / 최민희(전 월간 말 기자, 민언련 기획관리국장) / 정지환(월간 말 기자) / 정광섭(한겨레신문 기자) / 오연호(월간 말 심층취재 전문기자) / 김영식(사진실험공간PARA실장) / 성유보(민언련 이사장, 전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 장호순(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 **강의내용**

기자정신에 대하여 / 신문제작구조의 이해 / 스트레이트기사쓰기 / 현장취재의 이해(월간지) / 인터뷰기사쓰기 / 특집기사와 르포 / 해설기사 바로쓰기 / 편집읽기와 제목달기 / 언론매체와 사진 / 논설칼럼 바로쓰기 / 지역언론과 민주주의 / 신문제작 평가 2회

▶기간 : 3개월 매주 수·토 주2회 (연4회)
▶수강료 : 400,000원

처음 해보는 일이라 뭐가 뭔지..많이 헤매기도 했지만! 신문분과와 방송분과 한배를 타고 삐그덕삐그덕~ 드디어 목표점에 도달! 야호!!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민정

방송분과 자료집 작업...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 싶다. 한 일은 없지만 배운 것은 많았다. 아무 먹자것도 없는 일에 밤낮없이 시간과 노력을 바치는 사람들에게서 삶의 또 다른 방식을 배웠다...
-은갱

편: 편하고, 안락하고, 게으름을 즐기며
집: 집에 새로 설치한 유선방송을 하루종일 보고 싶은 마음 가득했지만
후: 후회나 후환 같은 것들이 두려워 나는 오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나간 신문
기: 기사들을 찾고 있다.

덧붙인는 말....

혜원이는 신문에 손을 비어 피까지 봐야 했답니다. 그러나 지넉 모임마다 중국요리에, 뿌셔뿌셔에, 파리바게뜨 빵들에....그리고 지혜 간사님에 안겨주신 커~어다란 오잉덕에 그냥 마냥 즐거웠답니다.

편집증이 괜히 "미쳤다"라는 맥락으로 쓰이지 않음을 알았다. 더불어 나는 미치지는 않았다. 기존에 축적된 소중한 모니터 자료 - "과거의 산물" ,을 동시진행형인 현재와 앞으로 닥쳐올 미래를 겨냥한 "서적"으로 재창조하는 것은 일종의 산고(産苦)를 느끼게 만든다. 따라서 정말로 아쉬운 것은, 미치지 않은 내 입장에선 그런 고통을 느낄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페이지를 차곡차곡 넘기는 경쾌한 소리에 흠뻑 빠져버리겠지.

정말로 "미치셨던" 영민형과 기타 반미치광이(?)로 사셨던 기범형, 영은 누나, 혜원 누나, 기타 등등의 인물들, 그리고 혹사당한 컴퓨터와 스캐너와 휴지통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낸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디지털에 오염되어 흑백으로 압사당하기 쉬운 현실에 아날로그적인 활력을 불어다 주었던 목캔디에게 사랑의 눈빛을^^ - 뭐, 지금은 당분으로 녹아서 내뱃속에 깨끗이 흡수되어버렸겠지만. --경구--

처음 모니터 자료집팀으로 발탁되었을 때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나의 뛰어난 감각을 총동원하여 꿈의 모니터 자료집을 만들리라. 그러나 기획회의가 거듭되면서 어린 소녀의 장밋빛 환상은 희미해지고 남은 것은 자료, 자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자료의 홍수.(경구..한때 널 원망한 나를 용서해라.) 결론적으로 내가 한 것은 원본 교정과 자료수집, 스캔작업, 이것이 전부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지력보다는 체력으로 하는 단순작업 이었다.
속칭 노가다꾼..
하지만 육체노동은 정신노동과 동등하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FOREVER 신문분과 !! --영은--

먼저, 이번 모니터 자료집 제작에 참여의 기회를 주신 민언련 선배님과 동료들에게 감사드린다. 자료집 제작팀 간에 서로의 관심과 배려, 또 이것이 결실이 되어, 자료집이 완성되었고 생각이 들었다. 그 만큼 이번 모니터 자료집은 우리 동료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희생, 서로간의 관심과 배려들 통해 만들어진 소중한, 인간적인 '정'이 담긴, 사람 땀내가 나는 그러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자료집을 통해 우리 사회 곳곳에 민언련의 소중한 애정이 담긴 우리 언론에 대한 비판과 대안이 소중하게 쓰여졌으면 좋겠다.
더불어 우리 사회에서 언론 개혁을 위해, 자신의 몸과 물질을 희생하면서까지 투쟁하시는 분이 있기에 아직은 우리 사회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 않다고 생각된다.
모니터 자료집 테스크 포스팀 파이팅 ! --창남--

한달여의 작업기간동안 서로 얼마나 진행됐냐며 물어볼 때 마다 '시작이 50%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장난처럼 그랬지만 막상 모니터 자료집 발간을 앞두고 그 말이 더욱 새롭게 느껴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하나씩 언론개혁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때 언론개혁의 50%는 달성된 것이 아닐까요? 민언련 신문분과·방송분과의 모니터 자료집의 그 50%의 시작이 되었으면 합니다. ps 0민2형 수고했어요~
- 분까장 온달

내가 민언련에서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시작한 '자료집 모임'. 역시 늦어졌군!!!
이유는 물론 나의 게으름...도움보다는 내가 도리어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된 자료집 모임.
이제는 자주 보기 힘들기에 미안한 마음으로 참여했지만
도움은 전혀 無!!!無!!! 광주에 가지만 서울에 올라오면 꼭 민언련에 들릴께요.
모두들 다시 볼 수 있을때까지 빠이빠이! -우석

원고 교정에서 세부 편집까지 모두 일일이 자료집을 제작한 회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민언련의 힘은 회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 자료집이 기득권 수구세력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신문과 방송이 반성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론개혁! 멀지 않았습니다.
- 짱 간사

끝까지 '정희'가
고생을 시킨다.
이놈을 찾으러 산전수전 다겪고,
부탁도 하고..
결국 여기까지 왔다.....
무덤덤하게 도는 지구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다.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적어 본다.
영민,경구,창남,혜원,영은,정훈,경훈,은경,우석,유정.....
당신들은 나의 머릿속에 기억이 되었답니다.
진실의 힘을 사용할 줄 아는 그대와 나 --bumcom--

〈경향신문〉

경 향신문이 변하고 있다.
향 긋한 냄새가 난다.
신 선한 변화의 바람이 느껴진다.
문 제아 신문이 이를 느끼려나.
-김시창-

〈KBS〉

KONG
JUNG(공정)
BANG(방) **S**ONG(송) 해라..
-깡패-

〈대안〉

대 안아!
안 녕!!(반가움의 안녕) -현정-

〈언론모니터〉

언 론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수구언론의
론 (논)조가 변한다.
모 든 사람들 '상식적인'언론을 볼권리
가 있듯이
니 나노 논조인 '비상식적인' 언론의 거
부할 권리도 있다.
터 러서 먼지 안나는 언론사가 없겠지
만 우리는 털고 또 턴다.
—김시창—

〈조선일보〉

조 신하게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선 두에 서서 개혁과 진보의 발목 걸
기에 앞장서니
일 반 시민들, 드디어 불매운동을 시작
하다. 조선일보는
보 지도 말고 사지도 정기구독은 더더
욱 않습니다.
—김은주—

〈조선일보〉

조 게 뭐야!
선 정적인데다가
일 방적 편파왜곡 보도 일색이구만.
보 도를 뭐 조따위로 해냐!
—또 김시창—

〈한겨레〉

한 나라당!
겨 레의 수치!!
레 미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한겨레 팀장 류—

〈대안〉

대 한민국이여
안 도했도 된다. 대안이 있다.
- 상품에 눈이 먼 김시창—

〈한국일보〉

한 마디만 하면
국 민여러분
일 단
조 선일보는 보지도 맙시다.
-해골-

〈인물과 사상〉

인 물었네
물 건이구만
과 찬인가
사 실이겠지
상 주자 인물과 사상
-또 김시창—

〈월간 말〉

월 간 '말' 잘하고 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간 간히 들려오고 있다.
말 도 안되는 말인가 말이 되는 말인
가..
—김시창—〉상당한 기회주의인데?
—〉이게 무슨 사행시냐!! 보안사항은
누설하지 말라!

〈공천반대〉

공 천좀 해주세요.
천 만원 가져와라.
반 만 갂아주세요.
대 끼 이놈아
-강수생각-

〈대안〉

대 안은 민언련 인터넷 방송국 이에요
안 심하고 참여하세요.
—또 김시창—

〈동아일보〉

동 냄새가 난다.
아 주많이
일 볼 때 신문
보 면 신문에 냄새 납니다.

〈한국일보〉

한 때는 잘나갔었지
국 보급 노름꾼을 키웠지만
일 수놀이는 안하나
보 고 있잖니 열나네
—한국일보 신문분과 팀 —

〈SBS〉

S es
B ed
S ports

〈9시 뉴스〉

9 시를 알리는
시 계가 울리면
뉴 스가 시작되지만
스 포츠 경기결과만 진실이네

〈통일 전망대〉

통 일된 세상 못보고 돌아 가실까봐
일 요일에 실향민 어머니와
전 망대에 찾아가니
망 원경으로 밖에 볼수 없는
대 한민국의 북녘 땅

〈조선일보〉

조 간이란다.
선 두주자라고 한다.
일 단 보면 알겠지만
보 지 않느니만 못하다.
-영민-

〈조선일보〉

조 갑제, 김대중, 류근일이 설치는 신문
선 진국 미국은 신처럼 모시는 신문
일 찍 일어나 조선일보를 보는 분들에
게 하고 싶은 말
보 지 마시죠! 정신 건강에 해롭습니다.